

# 교과서연구

제 40 호

2003. 6

차 례

- 발행인 / 한병천
- 편집기획위원장 / 김성환
- 위원 / 김만근, 김정호, 박삼서,  
송정현, 최봉규
- 간사 / 최해홍

## 권두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이종승 .....4

## 특별 기획

###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략

‘좋은 교과서’ 개발과 정책 수립의 방향/박삼서 .....8

교과용 도서 검정 기능의 질적 향상 방안/김정호 .....14

교과서 발행사의 역할과 제언/황태량 .....21

교과서의 발전 방향/김왕근 .....27

핵심 자료로서의 교과서와 교사의 역할/전병현 .....33

## 현장 교육

교육 기관과 학교 간 연계 체제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최완규 .....37

## 논 단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개발 체제 개선 방안/권영민 ...44

교과용 도서 발행에 따른 저작권법의 이해/정민택 .....50

교과서 검정 제도에 관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과

방향/허종렬 .....57

## 나의 제언

캐나다 현지에서 본 우리 나라의 조기 유학/서성진 .....64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최봉규 .....68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연재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양승윤 .....	71
-----------------------	----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지리과의 식민 교육 잔재 청산/민홍기 .....	76
『바른 생활』 이야기/정진권 .....	80
보람된 편수관실의 5년/국승길 .....	85
제4차 검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허강 .....	90

## 단상

교과서의 표현과 표기/정희창 .....	95
교육 현장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국사 교과서/김미경 .....	101

## 연구 과제 소개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연구.....	104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	105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	106

● 원고 모집 .....	63
● 연구재단 소식 .....	107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09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110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111

- \* 표지 글씨 : 신두영
-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 연재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양승윤 .....	71
-----------------------	----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지리과의 식민 교육 잔재 청산/민홍기 .....	76
『바른 생활』 이야기/정진권 .....	80
보람된 편수관실의 5년/국승길 .....	85
제4차 검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허강 .....	90

## 단상

교과서의 표현과 표기/정희창 .....	95
교육 현장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국사 교과서/김미경 .....	101

## 연구 과제 소개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연구.....	104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	105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	106

● 원고 모집 .....	63
● 연구재단 소식 .....	107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09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110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111

- \* 표지 글씨 : 신두영
-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 우리 헌법은

문화 국가를 표방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권 등을 규정해 놓았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는 제31조가 그것이다. 이 조항은 교육권의 실현에 필요한 교육 전문가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그 수단으로 교육 기관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육 환경의 자유 등을 든다. 교육 기관의 자유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자주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교육의 자유는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며, 교육 환경의 자유란 학교가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

■ 글 /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헌법의 이 규정은 학교가 오직 전문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 주겠다고 국민이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육의 전문성이고, 전문가의 자주성은 어느 범위까지이며, 그 중립성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가?

### 무엇이 교육의 전문성인가?

교육을 더 잘 하자는 데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굳이 구별할 이유는 없다. 사실 자신이 학교를 다녔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국민은 누구든지 교육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전문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교육의 전문성을 규정한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및 가치와 태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공교육 체제를 운영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상식과 다르게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식의 체계성이란 사실에서 추출한 개념 간의 인과 관계를 종합하여 이론 차원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이론 수준을 학습하면 인간과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낱말의 사실을 따로 아는 것보다 학문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교육의 전문성이라 할 수 없다. 공교육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 구조를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객관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도 일방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는데, 하물며 학습자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교육관에서 대상을 모르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의 전문성이란 대상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가르쳐야 할 지식의 체계성을 모두 갖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교육의 전문가가 교수이듯,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전문가이다. 물론 이러한 전문성은 교사만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다른 누구보다 전문성의 절대 우위를 가졌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 고사에 통과한 사람만 공교육의 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도 이래서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전문성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교과서와 평가를 예로 들어 보자.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 발달 정도에 맞도록 내용과 방법을 구성해 놓아야 된다. 현재 교과서 집필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지만 실

제로는 전문가라야 참여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시행한 중등 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교사가 다수 참여한 도서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일반 여론 중에는 교육적 의미와 거리가 먼 사례도 없지 않다.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폄하하거나, 검정 교과서 구성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였다는 등 본질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도 있었다.

또다른 사례로, 평가를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원래 평가는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변별력을 기본 조건으로 삼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의 본질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는 조건이 타당성이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교육의 본질 추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변별을 위한 난이도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을 보고 나면 세론이 쉽다 어렵다만 가지고 비평을 하고, 평가의 교육적 의의는 생각하지 않는다. 선발 시험은 변별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난이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타당성의 판단 자체가 전문적인 일인데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쟁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 공교육의 자주성은 무제한적인가?

그렇다면 교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가르치고 평가할 고유의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가 고시한 문서이고, 교과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발행된 배타적 자료이다. 교육과정은 단일종이지만, 검정제로 발행

하는 다종의 교과서는 저자의 철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같은 교과서를 가르쳐도 교사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어떤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해석하는가는 교사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고등 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것도 전문성에 터한 자주성 보장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 학교 교육의 자주성은 전문가인 교사의 관점과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성에도 한계가 없을 수 없다. 자주적인 교육권도 교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교육부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목적을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라고 천명하였다. 비록 추상적인 차원의 목적이지만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해석한다면 교육의 방향과 교육권의 한계를 추론할 수도 있다. 그 자질은 한정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방성을 띤 것이지만, 최소한의 요건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본권을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법적인 가치부터 인류애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를 들 수 있다.

보편성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주적 교육권도 이 기준에 비추어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보편성의 한계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나 그것 역

시 일차적으로는 교사의 양식과 전문성에 맡겨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로서 교사는 교육의 자주성을 갖는만큼 그에 따른 책무도 져야 한다. 국가나 사회가 학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가급적 간섭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교사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전문가도 자주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하려 하는만큼, 사회도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되는 일이다.

### 교육의 중립성은 누가 보장하는가?

중립성은 불편부당한 처지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교사가 그러하듯 정치권이나 사회 여러 부문도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보아야 한다. 헌법은 원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 하여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확장 해석을 해 보면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회 단체도, 더 나아가서 학교 자체도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격을 기르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중등 학생과 같이 아직 심신이 성숙되지 못한 대상에게 성인의 이해 관계를 반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사회나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특정 집단의 권력적 이해 관계를 학생에게 주입하고자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그런 편의에 따라 개편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인의 이력을 진리인 듯 기록하여 암송하도록 하는 북한의 교과서를 보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적 의미를 권력 집단이 판단하면 학교와 교사는 전문성도 자주성도 발휘하지

못한다. 겉으로 조용한 듯한 학교가 내면으로 금이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이제 국민 참여 시대를 연 우리는 과거처럼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중립성을 믿을 것이다. 물론 헌법이 말한 정치적이란 범주에 집권 세력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도 포함되는 것이다. 교육은 당파적 이해 관계를 초월하여 미래 이 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이 일에는 언론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다.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만큼, 학교가 제 길을 가지 못하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비판도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 난이도만으로 시험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나, 학교의 부분적인 문제나 소수 교사의 행태를 들어 공교육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중립성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 중립성이 보장될까? 중립성 향유의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의 책무도 크다. 교육의 자주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였듯이, 교사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나 방법에 지나친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교사 스스로 자기이념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외부의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학교도 정치권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 교육은 교사에게 맡겨 보자.

교육의 전문성은 교사가 가지고 있으며,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중립성을 보장하

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는 간섭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중립성보다 교육의 전문적 자주성을 살릴 환경을 보장해 달라는 적극적 중립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권리 위에서 참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듯이, 전문적 자주성과 중립성도 주장하지 않으면 지켜가기 어렵다.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일까? 한 가지 예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장을 들 수 있다. 그 개정권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지만, 시행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도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일체 교사 보듯이 전면 개편하는 대신, 수시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과 교사 협의회가 제안하여 정부가 공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 총칙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가 행사하면서도 교과에 대한 교사 참여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게 된다. 이 일에는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매섭다. 그 원인이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듭은 결국 학교가 풀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여 그 답을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교사뿐이다. 그래서 정부나 여론은 학교를 주시한다. 교육은 교사가 맡아야 한다.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도 이런 점에 있을 것이다. 21



# ‘좋은 교과서’ 개발과 정책 수립의 방향

■ 글 / 박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 1. 서 론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중심을 중심으로 기본 학습 요소를 체계화한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혜를 모아 살아가기 위하여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고 지필(紙筆)을 이용하여 서책을 만들면서부터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교과서’라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내용이나 외형 체제도 교육 이론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는 인류의 실질적인 역사요 산 증거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교과서의 질은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국가 발전과 미래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이를 지원하는 배려가 의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시화되고 지원이 원활한가에 따라 교과서의 질도 달라지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변화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과서 정책 방향은 교육의 성과와도 관계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좋은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변인을 먼저 알아보고, 이들 변인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 수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방향을 거시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 2. ‘좋은 교과서’ 개발 변인과 정책 수립

가. ‘좋은 교과서’의 내재적 변인

좋은 교과서에 대한 개념과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이의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수립이 용이하다.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이론이 분분하지만,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교과서 자체 변인으로 교과서에 담은 내용이나 형태적 측면에서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이 교



과목의 특성과 학습 목표에 따라 균형 있게 선정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자기 주도적으로, 아니면 공동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교수·학습 방법이 교과서에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교육 목표 달성에 실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의 전략이나 과정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학습 내용과 정보, 표현·표기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설명이 정확하고 통일성을 이루며, 특히 학습력 신장에 적합하게 지면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가 적절한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과서가 갖는 교육적 효과나 활용 측면에서 고려되는 변인이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향상에 적합하며,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도 좋은 교과서와 관련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했는지, 학습자·교수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체제를 구비하였는지 등도 좋은 교과서의 필수적 요소이다. 여기에는 물론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간의 합리적인 종적, 횡적 관계도 포함된다.

상기의 요소가 좋은 교과서를 제어하는 내적 변인의 총합(總合)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을 의도적으로 신장,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 설정과 제도 확립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 나. ‘좋은 교과서’의 외재적 변인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여되는 외재적 변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교과서 내용과 형태를 제시하는 규범적 변인으로 교육과정,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등이 있다. 이들 변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하여 교과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들의 내용과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교과서 질이 바뀐다.

교과서 개발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성향과 수준도 교과서의 질을 좌우한다. 교과서 정책 입안자, 집필자, 심의 참여자는 직접적으로 교과서 질과 관련되어, 이들의 교과서관과 개발 능력은 교과서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교수자·학습자, 출판업자 등은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좋은 교과서’의 개념을 검증하여 제시하는 등 교과서의 질을 평가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간접적으로 교과서 질 향상에 관여한다고 하겠다.

또, 좋은 교과서 개발과 관계되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는 편찬 제도적 측면이다. 편찬 제도는 앞에서 열거한 좋은 교과서 개발에 관여되는 여러 변인을 추장(推崇)하기도 제어하기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도 좋은 교과서 개발에 관여되는 변인이 된다.

결국, 교과서 정책은 좋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규범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제도적, 법률적으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3. 교과서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 가. 정책 수립의 전제와 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좋은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변인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을 통한 교육 혁신을 의도적으로 모색하려면 다음 몇 가지 관점을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한다.

①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유연성 관계 유지 :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서도 이에 따라 일제히 개편되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지식의 생산과 전달이 급속한 현대에는 지식을 교육과정에 흡인하고, 다시 교과서로 구조화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관계를 ‘상시 개정-수시 개편 체제’라는 유연성 관계로 유지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는 교과서 형태와 행정의 운영에도 변화가 필연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② 교과서 개발의 개방성 확보와 조정 : 교과서 개발에서 자율성, 전문성의 제고는 좋은 교과서를 담보할 수 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교과서를 단일 종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교육의 창의성을 제한할 우려가 많고, 내용이나 외형 체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도서의 수를 무한정 다양화하고, 집필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무제한 용납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일반성과 보편성을 구현하도록 조장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유지할 것인지를 정책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조정해야 한다.

③ 지식, 정보의 신속한 유입 장치 마련 : 현

대는 지식의 생산과 이의 빠른 수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편찬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신속하게 흡인(吸引)할 수 있는 편찬 제도를 강구하고, 이에 합당한 인력 확보와 배치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개편이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모색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④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과 활용 : 단일한 발행 제도로는 교과서의 수요나 활용에 한계를 가져오므로 이의 요구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국정 도서의 개발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검·인정과 자유 발행 도서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제도가 이에 합당한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 정보의 신속한 수용과 전달을 위해서는 전자 교과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교과서 개발과 활용에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나 대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⑤ 다원화 사회에 적합한 내용 구성 및 검증 :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각계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리이러한 내용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민 보통 교육을 책임지는 교과서의 특성상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요구의 타당성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⑥ 교과서의 객관적인 질적 수준의 공시(公示) : 좋은 교과서를 이루는 여러 요소를 객관적 수준으로 실제 보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교과서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모범 교과서’의 실체를 보여 줘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좋은 교과서의 실물에 대한 막연함을 불식하고, 교과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⑦ 교과서 평가와 수정, 보완 체계 확립 : 개발이 완료된 후 교과서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수정, 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구현한 교과서는 국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의 집적물(集積物)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서의 우열을 밝히고 앞으로의 개발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과 연계된 원활한 수정, 보완 체제를 구축하여 생명력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⑧ 교과서 활용 안내와 홍보 체계 구축 :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후속 지원과 교과서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여기에서의 지원은 수정, 보완의 차원이 아니라 부수되는 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과서의 활용도를 다각도로 제고하는 지원 형태를 말하고, 홍보도 단순히 잘된 점을 부각하여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가 함께 교과서의 제반에 대하여 토론하는 마당을 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

⑨ 교과서 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 :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교과서의 질은 개발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검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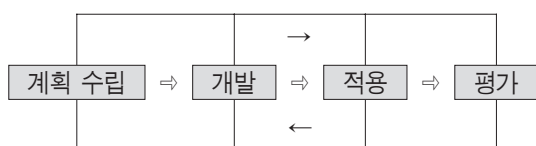
며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서에 대한 안목과 개발 능력을 계획적으로 넓혀 주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교사 양성 기관에서 ‘교재 개발학’ 관련 강좌를 늘리고, 이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책 입안자의 능력 신장에 관한 것도 같은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다.

⑩ 효율적인 제도적, 법적 지원 체제 확충 : 좋은 교과서 개발의 기본 조건은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과 법적 뒷받침으로 그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로마가 천년 동안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권력을 가진 개인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도나 지원 법률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좋은 교과서의 개발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이를 받쳐 주는 법률적 버팀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사항도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나. '편찬 제도의 역동성' 확보와 교과서 정책

교과서 정책의 기본은 편찬 제도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교과서 편찬 제도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면 그 개념도 단선적인 정의에서 탈피하여, 교과서 편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교 현장에서 선택, 사용되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의미 범주로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편찬 제도에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찬 제도의 역동성은 다음과 같은 송환(送還) 과정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변인 간의 역학 관계를 상승적으로 작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교과서 개발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개발, 적용, 그리고 교과서 평가까지 환류(feedback) 체계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역동성의 확보는 교과서 발행 제도에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교과서의 저작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정, 검정, 인정, 자유 발행 등으로 나누는데, 이는 제도상의 구분일 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 유형을 구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정 ㉠ ⇒ 검정 ㉡ ⇒ 인정 ㉢ ⇒ 자유 발행’의 순차는 국가의 간섭이 약화되는 단계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 구분의 경계에 해당하는 제도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국정과 검정이 가미된 제도(㉠), 검정과 인정 중간 형태의 제도(㉡), 인정과 자유 발행 제도가 혼합된 제도(㉢) 등 다양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도는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심층적 연구로 구체적인 모습을 밝힐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거시적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들 각 제도나 단계 내에서 절차나 방법에 해당하는 미시적 측면도 그 역동성을 확보하여 교과서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주로 위탁 개발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만 국정 교과서의 편찬 절차나 운용 방법, 검·인정의 세부적인 심의 기준이나 절차도 합목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제시, 실천되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 관여되는 요건 중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슬기롭게 벗어나는 것도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역동성의 확보이다.

이처럼 좋은 교과서의 개발은 교과서의 질과 수준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역동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교육 내용과 방향, 이에 따른 교과서 편찬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편찬 제도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교과서 편찬 제도의 개념과 운용을 역동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4. 미래의 교과서와 정책적 대비(對備)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도 바뀌고 있다. 이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하여 그 개념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

앞으로,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의 형태와 기능, 위치 변화 추이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과거 : 만들어진 교과서로 가르침.(변화시킬 수 없는 교과서)
- ② 현재 : 만들어진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

며 가르침.(변화시킬 수 있는 교과서)

- ③ 미래 : 교과서를 만들어 가며 가르침.  
(고정된 형태가 없는 교과서)

①은 서책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②는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형태로 전자 교과서를 들 수 있다. ③의 경우 미래에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교과서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수준과 운영 지침만으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사가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가면서 교수·학습을 실천하게 된다. 이 경우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활용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짐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교실의 환경 구조가 달라지므로 교수·학습의 방법도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의 교과서 편찬 제도는 현재와 달리 그 발상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편찬 제도나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형의 교과서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이에 대비한 준비가 지금부터 계획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분류하거나 목록화해야 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과서 박물관과 도서관의 설립이 긴요한 것처럼 ‘교육 자료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매체의 활용에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에는 공동체 교육으로서 학교의 위치와 기능도 달라지고, 더불어 학교의 구조와 교육적 틀도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 정책은 학교 교육의 기능 재정립과 보조를 맞추며, 지금과는 달리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 5. 결 어

‘좋은 교과서’의 개발은 ‘좋은 교과서 정책’의 수립과 그 역동적인 실천에 달려 있다. 그런데 좋은 교과서 개발에 관여되는 변인을 고려하여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기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들 변인을 추장하거나 제어하는 것도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이상에서의 논의는 ① ‘좋은 교과서’의 개념 정립, ② 교과서 개발 관련 인재 양성, ③ 제도적, 법적 지원 장치 마련 ④ 편찬 제도 운영의 역동성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을 위하여 상기의 요소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과 운영, 합리적인 법률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모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확고한 신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교과서 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발전과 장래를 염두에 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설정,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담당 부서의 인적, 물적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책언(贅言)이다. 23



# 교과용 도서 검정 기능의 질적 향상 방안

■ 글 /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연구부장)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천명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한 검정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하였다. 검정은 민간 상품의 시장 진입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가 민간에 관여하는 ‘교육과정 고시 → 검정 도서 공고 → 집필상의 유의점·검정 기준 발표 → 교과서 심의본 저작·제출 → 심의 판정 → 학교 단위의 교과서 선택 → 발행·공급’으로 진행된다. 검정은 교육과정 개편기마다 다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여 다음 번 검정의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검정 과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절차적 합법성과 판단의 공정성 및 결과의 합목적성이다. 합법성은 심의 과정을 법규에 따라 진행하였는지로 점검하며, 공정성은 판정을 할 때 같은 것은 같도록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합목적성은 심의 결과 교육과정이 지향한 교과서를 제대로 가려 내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가치이다. 절차적 합법성과 심판의 공정성

은 공공 행정의 형식 요건은 되지만, 그것이 바로 실체적 합목적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 판정이

란 완전한 시비(是非)나 정오(正誤)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교육과정 취지와 의 정합성 정도를 검정 기준에 따라 질적으로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목적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이 글은 합목적성을 중심으로 검정 기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물론 검정 기능의 질적 수준은 검정 과정의 제도적 절차, 검정 심의 위원회의 판단력, 심의 대상 도서의 완성 정도 등 다수 변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검정 기능의 수준 향상 방안도 이를 통합하여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검정 교과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본 뒤, 향후 검정의 기능 개선 방안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1. 검정 교과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

교육부는 1999년 중등 학교 검정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통해 제7차 교육과

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상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내용과 편집, 외형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혁시켜 학습자 수요를 창출하고 교수·학습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 창의력과 사고력 및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구성’을 기반으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지향한 것이다. 검정 교과서가 이런 요건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검정의 합목적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연구팀은 2002년 5, 6월에 전국의 중·고등 학교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검정 교과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새 교과서가 교육과정 취지를 어느

정도 구현하였는지 5 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응답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제 7 차 교육과정 교과서상인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라는 질문에 대하여 51.8%(687 명)는 다소 그러하며 11.4%(140 명)는 크게 그러하다고 하여 전체 응답자의 63.2%(827 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물론, 32.7%(402 명)의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고 하여 개선된 것을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정적인 응답이 4.1%(51 명)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 요약형이 아닌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는 교과서, 실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교과서’라는 항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교과서의 활동형에 대한 평가도 61.6%(757 명)는 긍정

〈표 1〉 중학교 검정 교과서에 대한 평가

단위 : 백분율(빈도)

구 분	쉽고 재미있고 편리한 교과서	학습량을 30% 감축한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 가능 교과서	수준별 학습 가능 교과서(해당 교과)	활동 형태의 교과서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는 교과서	실용적인 교과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0.7 (9)	7.3 (90)	0.9 (11)	2.0 (18)	0.2 (3)	0.5 (6)	0.5 (6)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3.4 (42)	21.5 (264)	9.2 (113)	15.7 (140)	5.0 (61)	4.9 (60)	6.0 (74)
그저 그렇다.	32.7 (402)	<b>41.1 (506)</b>	<b>46.1 (567)</b>	<b>51.6 (461)</b>	33.3 (409)	41.8 (514)	38.0 (468)
다소 반영되었다.	<b>51.8 (637)</b>	26.5 (326)	39.2 (481)	26.9 (241)	<b>51.0 (627)</b>	<b>44.1 (543)</b>	<b>44.6 (549)</b>
크게 반영되었다.	11.4 (140)	3.6 (44)	4.6 (57)	3.8 (34)	10.6 (130)	8.7 (107)	10.8 (133)
계	100.0 (1,230)	100.0 (1,230)	100.0 (1,229)	100.0 (894)	100.0 (1,230)	100.0 (1,230)	100.0 (1,230)

\*출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연구.



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5.2% (64 명) 만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는 교과서인가에 대해서도 52.8% (690 명) 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5.4% (66 명) 만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제 7 차 교육과정이 강조한 ‘학습량의 30% 감축’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30.1%, 370 명) 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28.8%, 354 명) 에 차이가 별로 없고, 그저 그렇다고 판단한 응답자가 41.1% (506 명) 나 되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교과서 내용 및 구성 체제와 관련되는 본질적인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중학교 교사들의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등 학교의 반응도 유사하였다. ‘재미있고 편리한 교과서, 활동 형태, 실용성’ 등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제 7 차 교육과정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항인 ‘학습량 감축, 수준별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한 응답률이 높았다. 물론, 학습량 감축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응이 37.6% (335 명) 와 38.1% (339 명) 나 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교과서 개편에도 불구하고, 과목별로 전통적인 교육 내용 요소를 줄

〈표 2〉 고등 학교 1학년 교과서에 대한 평가

단위 : 백분율 (빈도)

구 분	쉽고 재미있고 편리한 교과서	학습량을 30% 감축한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 가능 교과서	수준별 학습 가능 교과서 (해당 교과)	활동 형태의 교과서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는 교과서	실용적인 교과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0.9 (8)	6.7 (60)	2.2 (20)	5.0 (31)	1.0 (9)	1.0 (9)	0.8 (7)
반영되지 않았다.	5.7 (51)	14.0 (125)	13.4 (119)	18.7 (117)	5.4 (48)	6.2 (55)	8.9 (79)
그저 그렇다.	35.6 (317)	<b>40.1</b> <b>(357)</b>	<b>44.3</b> <b>(394)</b>	<b>48.6</b> <b>(304)</b>	34.5 (307)	<b>42.0</b> <b>(374)</b>	34.2 (304)
다소 반영되었다.	<b>46.5</b> <b>(414)</b>	30.1 (268)	33.3 (296)	24.9 (156)	<b>49.2</b> <b>(438)</b>	<b>42.0</b> <b>(374)</b>	<b>44.2</b> <b>(393)</b>
크게 반영되었다.	9.6 (85)	7.5 (67)	4.8 (43)	2.9 (18)	8.3 (74)	7.4 (66)	10.8 (96)
기타 (무응답)	1.7 (15)	1.5 (13)	2.0 (18)	—	1.6 (14)	1.3 (12)	1.2 (11)
계	100.0 (890)	100.0 (890)	100.0 (890)	100.0 (626)	100.0 (890)	100.0 (890)	100.0 (890)

\*출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연구.

이기 어렵다는 교과 교육의 현실 상황이나, 수준별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교사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단계형, 심화·보충형은 모두 정교한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한데, 아직 그러한 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아서 교사들이 수준별 지도를 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는 교과서인가라는 문항에 대한 반응도 ‘그저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는 반응이 같은 정도로 나타난 것도, 학교 상황이 여전히 암기 위주의 교수·학습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검정이라는 경쟁 체제에 따른 민간 저작자의 창의성 발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에도 문제점은 많이 있다. “교과서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라는 서술형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주로 언급한 내용은 수업 현장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내용의 현실성 부족, 학습 내용에 맞지 않는 탐구 자료, 내용 구성의 치밀성 부족, 탐구 활동과 자료의 중복, 저자의 전공 분야에 따른 편향성,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이다.

좋은 교과서에 질적 상한선은 없지만,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필요하다. 내용의 정확성과 어법에 맞는 문장 기술, 그리고 체계를 갖춘 논리성 등이 그러하다. 아무리 외형 체계를 개선하여도 이 조건에 어긋나면 우수한 교과서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 질 관리는 우선 최소한의 조건인 오류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는 ‘저작자의 치밀한 집필과 검토→엄정한 검정

심의→사용자의 비평→발행사의 사후 관리’ 등 여러 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집필상의 문제는 저작자의 도덕적 책무로 귀결되고, 검정 심의는 진행 과정과 심의 위원의 학문적 토대에 따르며, 사용 중의 비평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된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발행사의 이윤 동기에 터한 경영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모두 검정 제도라는 체제적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 2. 검정 심의 과정의 개선 방안

시장 경제 체제의 민간 부문은 이윤 동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교과서 산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발행사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투자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에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검정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도 성취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하대학교 홍후조 교수는 본지 39 호에서 더 나은 교과서를 위하여 ‘검인정제 확대, 수정·보완 발행 체제, 정기 검정제, 정책 결정과 시행의 일원화, 지도서의 인정제화, 교과서 형태의 다양화, 발행사의 전문화, 모니터제, 선정 범위의 광역화, 교과서 대여제’ 등 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었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도 ‘검정 제도의 장기 예측 가능성, 민간 부문의 자율성 강화, 심의 과정의 정밀도 향상, 사후 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체제 개선의 중핵으로 제안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검정 심의 과정의 수준 향상

방안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 제도상 검정 심의 과정은 ‘심사본에 대한 기초 조사 → 1차 심의, 판정 → 부적격 판정의 이유 고지, 적격본에 대한 수정 지시 → 수정 사항의 확인을 위한 2차 심의, 판정’으로 진행된다. 심의는 시장 진입 여부를 판정하는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공적으로 논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원회도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런데 심의본에 내재된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하는 일은 심의 대상과 심의 위원의 수 및 심의 기간 등 체제적인 면과 심의회 구성원의 능력이나 참여 동기 등의 인적 요소에 달려 있다. 체제 문제의 대안은 각 구성 요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해야 찾을 수 있고, 인적인 면은 도덕적 책무 의식과 유인 기제로 접근해야 설정할 수 있다.

#### ○ 검정 시행의 주기적 분산화

검정 심의를 정밀화하기 위해서는 검정 체제를 전 교과 일제 검정보다는 부분적 수시 검정제로 바꾸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교육과정 개편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교과서 검정 주기를 몇 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부정기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대신, 수시로 교과별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정도로 개정하고, 교과용 도서도 그 부분만 수정·보완하여 검정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수시 검정제가 합리적인 대안이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모든 교과목을 동시에 할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순환 개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대 흐름과 사회 상황을 바로

반영해야 하고, 배경 학문의 동향도 빨리 변하는 교과인 사회과학과 과학과 등은 관련 내용을 매년 부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정 심의를 상설화해야 한다.

교과서도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부분만 반영하고, 심의도 그 수정 사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교과서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자료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검정 뒤에도 교과용 도서를 수정·보완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됨.
- 점진적 수정·보완 과정에서 질을 향상시키는 경험이 축적됨.
- 판을 거듭하는 교과용 도서가 학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
- 검정 신청을 매년 할 수 있으면 발행사가 자원 배분을 신중적으로 하게 됨.

이 대안은 교과서 개발 경험의 누적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규범적 당위성), 발행사도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수정할 수 있으며(실현 가능성), 전면 개편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효율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정 심의를 매년 일정 시기마다 반복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는 자원의 연차 배분 효과와 부적격 판정에 따른 사후 시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학교의 채택을 위한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하여 검정 1차 연도에 모든 과목을 출원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학교에서 선택 도서를 매년 교체할 수 있다면, 2차 연도에 더 질 높은 도서를 개발하는 발행사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 ○ 검정 대상의 집중화

검정 심의의 정밀도는 시간 투자의 집중화를 전제로 한다. 현재 약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교과서와 지도서 심의를 각각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마쳐야 한다. 당연히 시간 배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지도서를 자유 발행제로 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교과서 심의에만 집중하거나, 지도서를 교과서 심의시에 참조 자료 정도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지도서도 중요한 도서이지만 교과서에 비하여 상대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서와 지도서를 모두 각각 장기간 심의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과서 한 가지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심의 기간과 저작자의 수정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도서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다.

이렇게 대상을 집중화시킨 다음에 심의 내용도 질 판단에 집중하여야 한다. 검정 과정에서 심의본의 오류가 그것을 수정 지지하느라 질 판단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3년간 검정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한 사안이 약 274,000 건에 이를 정도로 오류가 많았다. 이러한 오류를 검정 심사를 하기 전에 줄여야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다.

2002년도에 검정 위원 210 명을 대상으로 그 방안을 조사한 결과 “미리 샘플 조사를 하여 일정량 이상의 오류가 있으면 심의회에 넘기지 않는다.”(29.3%, 61 명), “심사 전 오류를 먼저 지적하여 수정토록 한 뒤 심의회에 넘긴다.”(28.4%, 59 명), “심사 중 일정량

이상의 오류가 있으면 바로 부적격 처리한다.”(25%, 52 명), “현재와 같이 내용 오류도 한 항목으로 평정한다.”(17.3%, 36 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의 83%가 현재의 방안으로는 교과서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사 후 방안으로는 “판정 후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발행 정지”(48.1%, 101 명)와 “학교에 공개하여 채택에 영향을 줌”(41.0%, 86 명)을 많이 지지하여, 실제 심의를 해 본 심의위원들의 오류에 대한 문제 의식이 비교적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검정 심의회 참여의 개방화

현재 검정 심의 위원회는 교과와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교수와 교사를 각각 반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세부 전공을 모두 안배하지 못하여 오류 분석이나 질적 판단에 한계도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듯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회 구성원을 늘려 공공재인 교과서를 사회 전체가 합의하여 만들어 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지만, 시민 활동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원 봉사 문화를 구축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리 위원의 자격 조건과 권한 및 책무를 고시하여 자원자를 모집한 뒤, 기준에 따라 엄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단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 과정이 방만하고 사적 이해 관계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교과별 검정 심의의 운영 주체를 분명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검정 자체가 민간 부분의 참여 활성화를 겨냥하는 제도이므로 개방 체제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검정 심의의 초점화

오류가 적은 심사본을 대상으로 심의한다면 위원회는 질적 판단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그 판단 기준은 교육과정과 검정 기준 등 공식적인 문서이지만, 그 이상의 교과서 구조적 체계를 분석해 낼 수도 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보자.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문제이다. 지난 검정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교육과정 내용을 순서와 요소 그대로 반영하였는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재구조화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통합이 필요한 것이나 순서를 학습 과정에 맞추어 바꿀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창의적으로 재조직한 도서는 그 타당성을 분석하여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내용 전개 체계의 논리성과 조화성을 살필 수 있다. 논리성은 내용과 내용 간의 인과 관계나 선후 관계를 따져 학습자가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조화성은 내용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주 내용과 자료(일기, 탐구, 삽화 등)의 일관성을 보는 것이다. 탐구형 교과서라 하여 탐구 자료만 나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문 내용을 응용하거나 내용상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과학 교과서의 실험 자료는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데, 이는 실행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심의 기간 중

에 실험 자료만 따로 모아 협력 학교에 의뢰하여 검증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의 학문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일도 심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 분석은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학습자가 교과서를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내용 자체의 고난도 이론보다는 설명하는 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장문을 사용하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검정 심의 과정에서 문장을 검토하여 수정 지시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검정 심의 과정에는 문장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교과서 간 용어 수준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볼 수 있다.

교과서는 저작자와 발행사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장차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과 사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여 질적 수준을 가르고자 검정 심의를 한다. 검정 기능의 수준은 참여 주체의 헌신 몰입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저작자와 발행사의 이윤 동기를 자극하여 질 높은 도서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장기 정책을 세우고, 검정 심의 과정에 사회의 전문적 자원을 동원하여 검정 심의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 교과서 연구 자문 위원회(모니터 요원)를 구성하여 계속 검증해 나가면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 교과서 발행사의 역할과 제언

■ 글 / 황태량(대한교과서주식회사 대표이사)



### 들어가기 전에

지난 호 특집 기사인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를 읽으면서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각 부문별로 해야 할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워하던 차에 원고 청탁을 받아 다소 머쓱한 기분이다. 이번 호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호의 특집 기사들은 평소에 필자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교과서상을 다시금 정립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 요구나 교육 환경의 변화 등에 맞게 늘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교육 환경(여건) 등에 관련된 글이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 등은 언제나 필자의 관심사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교과서 개발 기관, 집필자, 발행사(출판사)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조망해 본다고 한다. 원고 청탁

을 받고 필자는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노력에 대해 몇 번이고 자문해 본 결

과, 지금까지 교과서 개발을 하면서 쌓아 온 나름의 노하우와 우리 나라의 교과서 개발 환경(여건), 교과서의 고객인 교사와 학생의 입장과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또, 이러한 노력들은 이론적인 형식 논리의 전개나 공허한 이상(理想)의 제시가 아닌, 다분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어야 하기에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제언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제 이번 호의 주제인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역할과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첫째,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로서의 인식을 분명히 하자.

훌륭한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교과서 개발의 중요성과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각 분야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는 해방 후 교과서 발행 초창기 때나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 발행이 완료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강조되어 왔다. 최근 들어, 우리의 교육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따라 이번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질 높은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점이 기존의 연구·집필진에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과거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에 대한 인식이 그저 교과서의 물리적 생산·공급자에 머물렀다면 필자만의 단견(短見)일까? 하지만 실상이 그러했다. 특히, 국정 도서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또는 교과서 개발 기관)에서 주어지는 원고와 사진, 삽화를 이용해 전통적이고 사전적 의미의 편집, 즉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엮고 짜서 지면을 꾸민 다음, 수차례에 걸친 개고 끝에 확정된 결재본대로 인쇄하고 제본하여 공급하는 일이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에게 주어진 임무의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의 중심점은 늘 연구·집필진이었고,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는 그야말로 주어진 원고를 책의 형태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공정을 하는 가공자의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 창의적 교육이 강조된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서는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역할이 전문적인 연구자이자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뀌게 되었다. 즉,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집필진과 함께 연구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교과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구상하여 교육 현장에 유용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다듬고 꾸미는 등의 창조적 작업을 교과서 발행사(출판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 발행사(출판사)가 기존에는 단순히 편집을 대행해 주는 차원(다분히 기계적이었다.)이었다면, 이제는 교육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작성을 위해 수행한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교과서연구소, 연구 보고서 ‘98-1)는 교과서의 물리적 생산과 공급자에 머물던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교과서 개발 과정에 편집자와 아트디렉터가 참여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수동적이었던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역할이 적극적인 참여자의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교과서 개발 시스템에서 정보화 시대의 교과서 개발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과서 개발 지침하에 탄생된 교과서는 선진 외국의 교과서와 견주어 전혀 뒤질 게 없다는 평가를 교육 수요자나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발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들의 인식 전환이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윤 추구만을 위한 교과서 개발이나, 파생 사업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로서 교과서 개발은 자칫 피동적, 수동적 개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나방들처럼 교과서 개발 시기에만 반짝 참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과서



정부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전문 인력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실적이 높으며,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역량 있는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 육성에 진력하여야 한다.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전문 인력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실적이 높으며,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역량 있는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 육성에 진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교과서의 개발 업무 형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정 도서의 경우,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교과 담당자들이 교과서의 체제 구상에서부터 현장 검토, 실험 학교 적용 등 온전한 모습의 교과서가 탄생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교과서 연구·개발진과 한 팀이 되어 참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교과서 개발 주체들은 각자의 영역에 스스로 간하지 말고 ‘좋은 교과서 만들기’라는 큰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연구, 개발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이와 함께 교과서 개발 기간도 현실화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여 집필하며 편집하는 등 일련의 교과서 개발 과정이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입장이 배제된 채 수립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 보면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불멘소리라 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교과서 연구·개발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체로 수긍

하고 있는 처지이고 보면 교과서 개발 일정 중 발행사(출판사)가 차지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이기적 요구로만 생각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현재의 개발 일정으로 개발된 교과서가 일견 합격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교육 목표를 담아 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편집과 디자인을 위해서는 아주 큰 제약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 개발 일정의 획기적인 개선은 곧 교과서의 외적인 품질 향상은 물론 내적인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기에 특히 강조해 둔다.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항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교과서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 될 것이며, 이 글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의 인식 전환’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이 선결되었을 때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자.**

이제 우리 나라도 근대적 형태의 교과서가 발간된 지 한 세기가 지났고, 정부 수립 이후 교육과정도 일곱 차례나 개정되면서 우리의 교과서는 그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그 이유의 한 가지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가 올라서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 가운데 교과서 발행사(출판사) 입장에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발행사(출판사) 나름대로 인적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인적 투자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적 투자라 함은, 편집자 및 편집 기획자 등 출판·인쇄 업무에 관련된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교과서 발행에서 교과서 편집자 및 교과서 편집 기획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투자 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는 몇몇을 제외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적 투자에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국정 도서 발행사(출판사)야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검·인정 도서에 출원하는 등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는 모든 출판사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교과서가 갖는 사회적 비중과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교과 전문 인력과 교과서 기획, 편집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조·제판 및 인쇄 시설 등 교과서 생산 시설 역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동 경기에서도 선수층이 두터워야 지속적으로 좋은 성

적을 기대할 수 있듯이, 양질의 교과서 편집자나 기획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양성하는 일은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사(출판사)마다 교과서 연구 부서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해 본다.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마다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책과 대안이 강구되고는 있겠지만, 그것이 임시 대책 기구라면 연구 부서 본연의 임무를 꾸준히 수행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연구 부서의 임무는 자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연구 업무가 주가 되겠지만, 정부의 교과서 정책 수립시 기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업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과서 발행에 관한 바람직한 기업 문화도 형성될 것이다. 또, 한국형 교과서 발행 제도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교과용 도서 연구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많은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공동 과제 수행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며, 교과서 개발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 정부는 연구 부서의 연구 활동 참여도가 높고,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에 대해서 교과용 도서 발행사 선정시에 가산점을 준다면 각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마다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개발 기관도 마찬가지다. 국정 도서 개발시에만 일시적으로 교과서 개발 기관을 둘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정 도서 개발 기관

필자는 “교과서 개발(발행)에는 리허설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언제 어느 때 교과서 발행에 대한 임무가 주어지든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을 육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검정 교과목 수를 늘리기보다 교과목당 개발 기관을 다원화하여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복수형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또다른 양질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서와 관련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나 출연 발행사(출판사)의 협력을 받아 체계적인 교과서 편집, 기획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강좌를 상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를테면 현재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어 문화 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실무 초급부터 편집 및 편집 기획 중견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강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 육성을 위해 교과서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셋째, 아이디어 개발에 끊임없이 힘쓰자.

세 번째 노력으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부의 교과서 정책은 물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교과서

란, 교육 정책이라는 이상과 현장에서의 적용이라는 현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교재를 말한다. 교육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유용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는 늘 아이디어 개발에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란, 현행 교과서 체제에 대한 대안이나 다양한 편집 기술,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외형 체제(판형, 지질, 색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등을 들 수 있다.

또, 전통적 형태의 교과서 이외에 부교재라고 부를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자료도 개발해야 한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선호하는 교사용 지도 자료, CD-ROM 타이틀, 듣기 테이프, OHP 필름, PDF 자료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적극 개발하여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제품으로 구현되는 데는 항상 비용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다. 현재 이러한 교사용 보조 자료들은 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들은 좋은 교과서를 개발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보조 자료들을 개발하는 데에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에서 발행사(출판사)마다 막

대한 비용을 중복 투자하여 이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창출하는 것이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몫이라면, 이를 실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이의 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아닐까 싶다.


## 글을 맺으며

글을 시작하면서 이 글은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역할과 제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바람과 요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이었다.

필자는 “교과서 개발(발행)에는 리허설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언제 어느 때 교과서 발행에 대한 임무가 주어지는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된 교과서는 외관은 화려하게 갖추어 있을지 모르나 내실 있는 교과서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교과서는 일순간에 쉽게 탄생되지 않는다. 다수의 출판사보다 나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의 육성은 관계자들의 새로운 인식과 전문 인력들의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의 입장에서 본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은 필자가 언급한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교과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같은 것이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국정 도서의 발행사가 다원화되면서 야기된 교과서 생산, 공급 시기와 일선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도 귀담아듣고 개선점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정성을 쏟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이러한 노력들은 어느 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결실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설령, 이러한 노력이 기업의 존립 목적인 영리와 이윤 추구에 당장은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양식 있는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필자가 언급한 이 세 가지 노력 중에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사항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그 자체는 미래의 교과서 출판 시장이 더욱 튼튼해지는 자양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인 2세들이 더욱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리라 생각한다. 

# 교과서의 발전 방향

—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중심으로 —

■ 글 / 김왕근(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1. 문제 제기

**제** 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에서 검정제 교과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그 동안 비판되어 왔던 교과서의 문제<sup>1)</sup>가 검정제라는 대안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배경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검정제의 도입으로 인해 교과서의 성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외형적인 판형, 분량(쪽수), 편집의 심미성, 학습의 탐구성, 선행 조직자로서의 단원 도입 등의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통과한 여러 종의 교과서가 성격상에 이렇다 할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일색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교과서에 비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학습논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교과서가 지니고 있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열린 교과서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형식은 열려 있으나 내용의 제시 방식이나 구성 방식 등과

같은 학습 논리는 여전히 닫힌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으로 검정 기준이나 절차, 교과서 집필진의 역량 등을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변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정 기준이나 집필진의 역량과 같은 요인은 부차적이고 파생적이며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보다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련 속에서 교과서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즉, 검정 기준이나 교과서 집필진 모두에게 공통되게 선행적으로 작용하는 근거 내지는 원천으로서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기본 성격에 있어 동형 관계에 있다.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해서 무엇 때문에(why) 가르치고 배우는지에 대한 처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가 상위와 하위, 전체와 부분, 외연과 내포, 선언과 실행, 간접

과 직접 등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교과서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진에 근거한 처방을 모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과서에 관한 관점을 학습관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한편, 교과서와 동형 관계에 있는 교육과정이 교과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 2. 학습관에 의해 매개된 교과서

교과서는 성격에 있어 교육과정과 동형 관계에 있지만, 성격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경우 내용과 방법이 별도로 구분되어 규정되는 것에 비해 교과서는 학습내용이 학습의 논리, 즉 학습관에 매개되어 양자가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이는 차이점을 지닌다. 교과서의 관점에 대한 다양성은 바로 이러한 매개를 통한 결합 방식의 차이, 즉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내용을 학습관과 매개시키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의 관계’일 경우 이를 교과서를 통해 구현하는 방식에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 관련된 사례(소재)를 탐구하는 방식,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어느 정도로 선택하여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다.<sup>2)</sup> 교과

서가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동형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교과서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의 다양성은 학습관에 의해 차별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바람직한 학습관을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내용과 어떻게 잘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의 통합성’, ‘학습의 구성성’, ‘학습의 주도성’ 등과 같은 학습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sup>

## 3. 학습관에 적합한 교과서를 위한 교육과정의 조건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성격에 있어서 동형 관계에 있으며,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근거와 원천이 된다. 즉,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행과 근거의 의미는 제도 수준에서의 우선성과 적용에 있어 선행하고 근거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의 논리에서 선행하고 근거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논리 내지는 학습관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교육과정에 교과서가 선행하고 교과서에 학습관이 선행한다. 논리적으로는 학습관에 적합하도록 교과서의 전형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학습관에 적합한 교과서가 만들어지도록 교육과정의 전형이 뒤이어 만들어져야 한다.

요컨대, 교육 논리의 측면에서는 학습관으로부터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연역되고, 제도의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와 학습관이 연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에 선행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학습관을 충족하는 교과서를 개



**상세화된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습관의 소홀 및 내용 선정의 선택성과 다양성 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만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숙의가 요구된다.**

발하는 데 어떻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가.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에 따라 다소 차별적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교과에서 교육과정은 내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를 보면, 1946년 교수 요목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 비록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내용을 진술하면서 학습 조건과 행동 변화를 결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용 중심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지침으로 내용의 30% 축소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제6차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왕근, 2000). 또, 내용의 진술 수준(범주의 위계 수준)이 상세화되어 있는 것 역시 제6차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내용 중심 관점이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상세화된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두 가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첫째, 교과서 집필진과 검정 심사진의 인식 및 교과서와 관련된 문화 역시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마저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을 경우 기존의 내용 중심 교과서 관점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이 내용 지배적으로 될 경우 학습 논리 즉, 교실 수업의 실체에 적합한 학습관이 소홀히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검정된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둘째, 상세화의 정도가 강할수록 교과서 내용의 선정 자체가 제한을 받게 되어 모든 검정 교과서가 획일적인 내용을 담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교과서 내용 선정이 다양한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상세화된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습관의 소홀 및 내용 선정의 선택성과 다양성 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만큼, 내용의 범주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교실 수업에 적합한 학습관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한편,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숙의가 요구된다.

나. 정합성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정



합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총론에 해당하는 성격 부분 및 목표 부분과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 및 학년별 내용 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학년별 내용 범주의 위계, 포괄성, 배타성 등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사회과의 예를 보면, 성격 부분에서 통합 사회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론의 학년별 내용은 분과 내지는 합산적 통합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정합성의 결여와 관련해서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내용 범주의 위계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정치 영역<sup>4)</sup>에 해당하는 내용이 4 학년과 6 학년, 9 학년, 10 학년 등 4 개 학년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데, 정치의 의미와 의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6 학년, 9 학년, 10 학년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참여의 의미와 의의 역시 9 학년, 10 학년에서 반복되어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심지어 정치의 의미와 의의의 경우에는 3 개 학년에서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 학년 한 학년에서도 서로 다른 단원에서 반복되어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학 또는 정치에 있어 그 중요성과 의의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소홀하게 편성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통치 구조 또는 정부론과 관련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6 학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아예 다루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해의 수준이 높아 초등 학교 6 학년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 학교 6 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비체계적이며 대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등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통치 구조에 관한 학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학년별 내용의 범주와 위계가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포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선적인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정합성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사의 실제적 지식과 숙의·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는 정치만 있고 교육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들의 상호 관계가 권력적임을 겨냥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의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교사, 학부모, 학생, 학자, 관료 등과 같은 관련 집단의 숙의 과정 및 요구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누가 누구에게 개정권을 부여하고 어떻게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인 셈이다. 물론 개정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이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측면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요컨대, 권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계 순서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여건을 염려하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적되어 왔던 문제 중의 하나로서 교육과정의 문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현장의 교육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이 문제인지, 전통을 유지하는 현장이 문제인지는 좀더 숙고를 요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교육과정과 현장 교육 간의 괴리가 사실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교육의 임지에서 실제적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집단의 개인적인 믿음과 지식이 교육과정 개정의 근거로 자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개정 과정에서 교사 집단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요구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또 요구 조사 자체가 교사의 믿음과 지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정치성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의 안목이 어느 수준이냐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설사 우리 나라 교사들의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가정을 할지라도 그러한 수준에 근거하고 있는 교사의 믿음과 지식을 하나의 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교육과정과 현장 간의 괴리는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포섭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떨치기 어렵다. 교실 수업 과정을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믿음 체계와 지식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교육과정 개발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현장 적합성을 충족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를 반성해 볼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사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제기한 통합 학습이나 정합성 결여 등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나 전문가 집단 간의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되어 왔던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는 개정안 보고서가 교육부로 들어간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개정안이 고시되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요컨대, 관련 집단 간의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상호 작용과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수정, 그리고 상시적인 숙의 등을 위한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은 모두가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막상 책무를 논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책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숙의와 합의의 과정을 전제한다. 합의의 과정은 정치적인 수 있다. 그러나 숙의의 과정은 교육학적이여야 한다. 교육의 현재적 실태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에 따라 마련된 인식틀에 대한 숙의의 과정이 선행되어, 교육적 의의와 현실 적합성이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교과서의 문제는 열린 교과서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닫힌 교과서로 집약된다. 열악한 교과서 개발 예산 및 교과서 개발 주체의 교과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의 나열’,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간주’, ‘암기와 같은 저급 사고력의 요구’, ‘학습력의 도외시’ 등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2) 한국과 미국의 사회과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김왕

근(2000)에 의하면, 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과 관련해서 한국은 사실적 지식 그 자체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실적 지식과 관련된 인과 관계, 비교, 대조 등의 내용 구조 속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근거로 귀납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추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러한 학습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 원리가 충족되기를 요구한다.

- 보다 깊고 넓은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현상의 연관과 아이디어의 통합 학습을 추구한다.
- 학습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으로 나타난다.
- 학습은 학습 내용(subject or lesson)과 관련지어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학습(learning) 자체의 맥락 속에서 학습 자체가 학습의 내용이 되는 의미를 지닌다.
-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로 이루어진다.
- 학습은 표출 학습(express learning)의 성격을 지닌다.
-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 학습은 학습 자체가 학습의 내용이 되는 성격을 지닌다.

4)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 영역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 4학년 :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자치 단체의 구성/자치 단체의 기능/지역 사회 문제의 해결
- 6학년 :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정치의 의미와 의의/선거의 의미와 의의/국회, 대통령(행정부), 법원의 기능/인권의 의미/기본권/국민의 의무
- 9학년 : 정치와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리/민주정치의 의의/시민의 권리와 국가 권력의 관계/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의회제, 선거제, 정당제, 지방 자치제)/지방 정부의 정책 과정/정치화 과정/선거, 언론과 여론, 이익 집단, 정당의 의의와 기능/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정치 발전 과제
- 10학년 : 정치 생활과 국가  
현대 정치의 과제(이해 관계의 조정)/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의 관계/정치의 기능(이해 관계의 조정)/쟁점의 해결 과정과 원리(기준)/

쟁점 해결 과정의 참여 주체/쟁점 해결 과정에서의 국가의 기능(법적 제도적 통제)/시민 참여의 역할

5) 이와 관련해서 영 교육과정(zero curriculum)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 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배제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참고 문헌

- 김왕근(1999).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응하는 사회과 학습의 준거 : 구성주의 학습관을 중심으로, 초등 사회과 교육, 제 11 집. 한국 사회과 교육학회.
- 김왕근(2000).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에 관한 비교 연구, 시민 교육 연구, 제 31 집. 한국 사회과 교육학회.
- 양미경(2003).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교육 과학사.
- 이혁규(2001). 제 7 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시민 교육 연구, 제 32 집. 한국 사회과 교육학회.
- 조영달(2001). 한국 교실 수업의 이해. 교육 과학사.
- Cherryholms, C.H.(1988). *Power and criticism : Postcultural investigation in education*. New York : eachers college press.
- Grimmett, P. P. & Neufeld, J. ed.(1994). *Teacher Development and The Struggle for Authenticity*. Teachers College Press.
- Grabe, M. & Grabe, C.(1998). *Integrating Technology for Meaningful Learning 2e*. Houghton Mifflin.
- McCutchen, G.(1995). *Developing the Curriculum: Solo and Group Deliber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ahoney, M. J.(1994). *Human Change Process*. Basic Books.
- Pinar, W.(ed.) (1975). *Curriculum theorizing: The reconceptualists*. CA: McCutchen publishing corporation.
- Schwab, J.(1969). The practical : A language for curriculum. *School Review*, 78, 1-23.
- Shön, D. A.(1987).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London: Jossey-Bass Publishers.

# 핵심 자료로서의 교과서와 교사의 역할

■ 글 / 전병현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 1. 들어가는 말

21 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 또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진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창조적 가치의 원천이 되며, 교육의 역할은 정보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창조성을 발휘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질 높은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의 수준도 향상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학습 능력을 향상·발전시킬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 2.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 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서

고등 학교 2, 3 학년에 적용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 적성,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 과목을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하게 개설해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선택 과목은 국가 수준에서의 개설 과목은 제 6 차의 과정 선택 53 과목, 교육 선택 7 과목 등 60 개 과목에서 일반 선택 26 과목과 심화 선택 53 과목 등 79 개로 늘어났다.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1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2 년 동안에 편성되며 교과와 특별 활동의 2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며,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련, 교양의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전문 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 등 10 개 계열로 구분하며, 국제 계열 고등학교 신설에 대비하여 ‘국제에 관한 교과’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과 내용의 배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가르쳐야 하고, 평가 문항의 출제도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만든 교재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교사가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 교사가 교과서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수 방법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에 제시된 심화·보충 과제는 교사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 교과서에 제시된 심화·보충 과제는 예시 자료이므로 교사가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른 자료로 대체하여 지도할 수 있다.

심화 또는 보충 학습 대상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담당 교사이므로 교과 협의회를 통하여 심화·보충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다.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 신설과 운영

제 7차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시·도가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교과목 신설 신청 기간은 서울, 강원, 전북, 경북 등 4개 교육청은 학기의 6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

다. 나머지 시·도는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혹은 6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라. 교과용 도서의 인정·개발·보급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검정 도서 선정에 관해서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인정 도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정 도서 승인 취소시 효력 발생 시기는 서울과 경남에서는 1년을 경과한 날부터, 강원, 충북, 전북은 1년 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과 울산은 인정 도서 유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 경남, 대구, 충북, 충남의 경우에는 심의 없는 인정 도서 교과목을 예시하고 그 교과목의 선정 및 인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 강원, 충북의 경우에는 교과서 개발 계획이 없는 과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제 7차 교육과정 중 단계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서 개발 계획이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철저한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 3. 더 나은 교과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가. 교과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교사의 첫 번째 임무는 교수·학습 지도에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행정적인 면이나, 학급 관리, 생활 지도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담당 교과에 대하여 실력 있는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 존경하고 선호하며 이런 교사로부터 지도 받기를 원한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지식이 팽창하고 양이 폭증

하며 생성 및 소멸도 빨라지고 있다. 전공 교과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세대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자세와 방법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학습에 대한 목표 의식과 과제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접 학습 지도를 담당한 학교 교사의 수업 개선 의욕과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기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 학습 과제는 무엇 때문에 다루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학습이 이 단계의 학습자에게 왜 요구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 내용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교과서의 기계적 전달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학습 지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힘있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교과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과의 성격, 특성, 해당 교과 교육의 방향, 교육과정 해설,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 방향이나 활용 방안, 단계별 지도 계획, 학습 지도 방법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 단원의 개관, 단원의 이론적 배경과 학습의 계열, 단원의 목표, 전개 계획, 학습 지도 방법, 평가의 주안점과 유형 등 교과의 구성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라.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을 해야 한다.

교과서는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잘 전달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과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 4. 학습 능력을 향상·발전시킬 수 있는 교과서를 위한 교사들의 역할

#### 가. 교과서 내용과 학생 생활 경험의 연계 역할을 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로 주자료이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교과서 내용의 주요 개념과 학생 생활 경험이 연계되어야 하며, 이 연계를 위한 역할은 교사가 가장 적임자일 수 있다.

#### 나.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위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질 높은 교과서를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단원 전개 체제를 위한 창의적 구안이 필요하다. 또, 학습 과정 중심의 단원 전개와 실용성 및 유용성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교과서 내용의 학습 과정과 탐구 과정을



중시하며, 실생활의 사례와 경험 등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을 학습한 결과로 개념 습득이 가능하게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교과서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 현장과 친화적인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과서별 각론 개발이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교과서의 특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여 양질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마. 연구·집필·협의진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집필을 위하여 집필자 실명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집필자의 책임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연구진이나 협의진에 참여하여 개발 과정에서의 방향 제시와 교과서 내용 구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 개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체계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으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5. 맺는말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교과서는 핵심적 학습 자료가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중심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과서

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교사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 이외에 정보 통신 기술 활용 교육, 시청각 교재,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집필·협의진 등에 다수의 현장 교사가 참여하여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가 편찬될 수 있도록 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진단, 수정하고 교과서 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 역할도 교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주 자료로서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가르치며, 편리하게 활용되어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가르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한 핵심 자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4

## 참고 문헌

- 교육 인적 자원부(2001), 제 7차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의 발전 전망
- 교육 인적 자원부(1999),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
- 교육 인적 자원부(2001),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제
- 교육 인적 자원부(200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교육 인적 자원부(2002),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서울특별시 교육 과학 연구원(1999), 서울 교육 '99 겨울호
- 서울특별시 교육 과학 연구원(2001), 고등학교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분석 연구



# 교육 기관과 학교 간 연계 체제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글 / 최완규 (전주 덕일중학교 교사)

## 1. 머리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학교급별로 각각 교육과정의 그 수준과 위상을 제시하여 상호 지원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연구들은 이들 사이의 연계 체제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교육 행정 기관, 혹은 학교 자체만의 독자적인 연구 차원에 머무른 경향이 있다. 본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 학교로서 도 교육청과 연구원, 그리고 초등 학교와 고등학교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그 동안 간과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 지역에 소재한 본교의 실정에 맞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운영 사례

### 가. 연계 체제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반 조성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교 자체적으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상급 교육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 (1) 연계 체제를 통한 과제 해결

##### (가) 시·도 교육청과의 연계

전라북도 교육청은 본교의 요청에 따라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중학교 교육과정 도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고, 순회 교사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원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나) 연구원과의 연계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고, 선택 과목 전환시 결손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학교 단위의 과제 해결

#### (가) 유휴 교실을 활용한 ICT 교과 교실 확보

제 7 차 교육과정이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실시됨에 따라 컴퓨터 선택 학급이 늘어나고 전교과에서 ICT 활용 수업의 필요성이 연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컴퓨터가 구비된 ICT 교실 증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정적으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본교 여건상 유휴 교실을 확보, ICT 교실을 설치하여 교과 교실과 겸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 (나) 교육과정 중심의 교무 업무 분장

시책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부서의 부장 명칭과 업무를 교육과정 실무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업무 및 시책 업무는 부서 산하의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 나. 수준별 교육 과정 편성·운영

#### (1)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 (가) 편성·운영 방침

- 수준별 수업의 형태는 특정 수업 모형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본교의 학생 수준과 교과 및 단원의 특성에 따라 본교의 실정에 맞게 각 교과별 협의회에서 수업 전략을 구상하여 적용한다.
- 학급 내 수준별 분단 수업의 효율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1 개의 심화·보충 학습용 고정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ICT 활용 교실을 이용하여 수시로 수업 중 수준별 소집단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수준별 학습지 활용)
- 단계형 교과와 경우 수학·영어 교과 협의회에서 정한 각각의 성취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 보충 과정을 거치거나 부진아 지도를 받도록 한다.
- 학습 자료는 동학년 교사끼리 분담 제작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로 교육청과 교육정보과학원에서 개발 보급된 자료나 인터넷에 탑재된 파일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활용함

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 (나) 학습 집단의 편성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동 수업은 오히려 불안정한 학습 분위기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본교에서는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학급 내에서 수준별로 소집단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학급 내 수준별 분단 편성은 학생들의 각 과목별 정규 고사나 수업 중 진단 평가 성적을 참고하여 상, 중, 하 그룹별로 동질의 수준별 집단을 편성하거나 교과의 단원과 학습의 성격에 따라 수준별 조화 속에서 협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질 학습 집단 등으로 분단을 편성하였다.

#### (다) 수준별 학습 기본 모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 교실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습 모형 자체가 수준별 수업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 때 학생들의 수준은 단순히 성취 수준만이 아니라 학습 속도, 흥미 등이 함께 고려된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교는 성취 수준과 흥미 수준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의 수준별 학습 기본 모형을 개발하여 각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2) 교과별 수준별 수업 모형

앞에서 제시된 ‘덕일중 수준별 학습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각 교과에서는 교과의 특성과 단원의 성격에 따라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교과별 수준별 수업 및 평가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교과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모형 개발 적용
- 본시 단원(기본 과정-일제 학습, 형성 평가-수준별 개별 학습) ⇒ 단원 마무리(심화·보충 학습-수준별 소집단 학습)
- 대단원(중단원) 말 수준별 소집단은 심화/보충 분단으로 편성(단계형-성취 수준별, 심화·보충형-성취 수준 및 흥미별)

#### (3) 특별 보충 과정 편성·운영

##### (가) 특별 보충 과정 개설 시기 및 학습 내용

정기 고사를 기점으로 이 기간까지의 단원별 진급 미달자를 선별하여 특별 보충 과정을 분기별로 운영함으로써, 결손 학습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보충이 해당 학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대상자 선정

구분 과목	1차 진급 미달자(이수 평가 대상자)	특별 보충 과정 대상자	부진아 지도 대상자
수 학	학기말 수학과 종합 성적 40% 이하	이수 평가 50~30%	수학 30% 미만 & 영어 40% 미만
영 어	학기말 영어과 종합 성적 50% 이하	이수 평가 60~40%	

(4) 초·중등 교육과정의 연계

본교는 관내 초등 학교와 수준별 교과 공동 협의회를 갖고 상호간 교육과정의 이해를 넓히는 한편, 초·중등에 걸쳐 유일하게 단계형 교과로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조직되어 있는 수학과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 7 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수학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으며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계통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계통적 연계성을 제 7 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여러 영역 중에서 검토하였는데, 특히 중학교 1학년 수학과 7단계는 초등 학교 6단계와 연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후 단계와의 계통적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1)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가) 시간 편성

구 분		1 학년		2 학년	
		주당 시수	연간	주당 시수	연간
교과 재량 활동	심화·보충	영어 1 시간	34 시간	영어 1 시간	34 시간
	선택 과목	국어 1 시간	34 시간	수학 1 시간	34 시간
창의적 재량 활동	범교과 학습	한문/컴퓨터 1 시간	34 시간	한문/컴퓨터/중국어 /일본어 1 시간	34 시간
	자기 주도적 학습	인성·진로·성 교육 1 시간	34 시간 이상	인성·금연·성 교육 1 시간	34 시간 이상
계		4 시간 이상	136 시간 이상	4 시간 이상	136 시간 이상

(2) 교과 재량 활동 편성·운영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교과서 진도와는 별도로 연간 지도 계획을 세워 교과 수업 내용을 심화·보충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평소 성취 속도가 더딘 학생들은 ‘심화·보충 고정 테이블’에서 교과서 기본 과정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나) 선택 과목의 개설

- 1학년의 선택 과목은 신입생들의 수요자 요구 조사의 어려움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한문 2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선택하도록 하며, 2학년은 학생의 선택권을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한문, 컴퓨터, 중국어, 일본어 4과목을 동시 개설하여 이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 2학년 진급시에는 선택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이 때 선택한 과목은 학습의 일정 수준의 성취와 연계성을 위하여 3학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결손 학습 보충-교육정보과학원 인터넷 방송 시청 권장)
- 선택 과목 중 생활 외국어가 2학년부터 개설됨에 따라 2학기 초에 1학년을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생활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과목 안내를 위해 인근 대학의 전문 분야 교수를 초청,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목의 특성 및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지도 교사는 한문, 컴퓨터에 본교 교사, 일본어, 중국어에 도내 고등 학교 순회 교사를 지원받아 배치하였다.

#### (3) 창의적 재량 활동 편성·운영

- 범교과 학습 활동 영역은 지도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영역 순으로 심도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3~4개 영역(인성·금연·진로·성교육)을 선정하여 집중 지도하였다.
-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에 매주 1시간씩 실시하되 연간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 중등 장학 자료를 참고하여 연 2회 6시간 묶음식 전일제 수업으로 현장 체험화 학습을 전개하였다.
- 자기 주도적 학습은 현장 탐구 학습 활동 위주로 실시하되 현장 체험 장소는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량 활동 체험 학습장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범교과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장소나 기관을 학교에서 사전 조사하여 안내해 주고 학급 단위로 학생들이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4) 초·중·고 연계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재량 활동의 시간 운영에 관련되는 편성·운영 지침을 분석하여 학교급별 연계성의 측면에서 재량 활동 영역 중 초·중·고에 공통되는 영역인 창의적 재량 활동의 연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 본교와 협력 학교로 연계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창의적 재량 활동 영역을 비교한 결과 각 학교들이 창의적 재량 활동 영역 활동 중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역은 ‘성 교육’과 ‘인성 교육’임을 밝혀 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발달 단계 이론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교급 간의 인성 교육과 성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교는 학군 내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협력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성 교육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고등 학교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 라. 특별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 (1)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특별 활동은 가능한 한 학생 스스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각 개인의 능력, 흥미, 관심에 부합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가) 편성·운영 방침

- 특별 활동 연간 지도 계획을 월별, 주별로 작성하여 계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집중 이수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특별 활동은 교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특수한 활동 주제와 관련된 분야는 해당 시간에 한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성 있게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 등이 신장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학교 행사 및 봉사 활동 기타 활동은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나) 특별 활동 시간 편성

특별 활동은 계발 활동, 자치 활동 및 적응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며, 연간 이수 시간은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고 시간은 68 시간 이상 편성하였다.

영역	활동시간	연간 이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자치 활동	매월 1~3주 월요일 1교시	25	28	22	1, 2학기 정일제
적응 활동	매월 4주 월요일 1교시	14	11	17	1, 2학기 정일제
계발 활동	· 1학기-매주 목요일 6, 7교시 · 2학기-특별 활동 발표회(축제)	34	34	34	1학기 정일제 2시간 연속 운영
봉사 활동	· 정기 고사 종료일, 지역 행사 · 2학기-목요일 6, 7교시	12	12	12	개인별 봉사 활동은 별도
행사 활동	학교 행사일	39	39	35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
계		124	124	120	



## (2) 특별 활동 영역별 중점 활동

### (가) 자치 활동

- 협의 활동(학급 회의)과 민주 시민 활동(학생회 선거, 토론회) 중심
- 매월 1~3주 학급 회의 연간 주제 목록 작성 제시

### (나) 적응 활동

- 1학년 : 집단 생활의 적응 능력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 2학년 : 건전한 교우 관계,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 3학년 :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

### (다) 계발 활동

- 강사의 전문성과 특수 시설이 필요한 계발 활동 부서는 외부 시설 활용(화산 체육관-힙합 댄스부, 빙상 경기장-스케이트부)
- 출석 카드를 활용한 특기생 외부 사설 교육 기관 위탁 교육 실시(무용, 국악, 미술, 피아노, 사이클 부문 특기자)

### (라)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단체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 (마) 행사 활동

행사 활동은 사전에 실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학생과 가정에 미리 알리도록 한다. 현장 체험 학습이나 야영은 사후에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게 하였다.

## 3. 맺음말

학교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 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상의 계통성과 계열성에 관해서도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동일 학군 내 학교급별 소단위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개발 체제 개선 방안

글 / 권영민(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 1. 서 론

**일** 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개발이  
란 한 체제의 교육 정책을 교

육 프로그램으로 전환(변역)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울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정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떠한 교수 원리에 입각하여’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당화하는 일이 교육과정 개발의 중심 과업이다(Short, 1982). 즉,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 나라의 경우, 광복 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의 개발이 있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선하면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김진락, 1992). 특히, 교육의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포함한 교육 내용의 개선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 시설 등을 포함하여 교육 여건 전반에 걸쳐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

현재 지난 수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제 7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적용 단계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교육부, 1998)에 의하면 제 7차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 1995~1997년(3년) 동안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참여한 인원만도 교육과정 전문가, 교수, 현장 교원,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연인원 14,322 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그 만큼 현대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과 이해 당사자의 요구 수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그 개발 횟수를 거듭할수록 보다 절차와 방법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조난심 등(1999)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이 주기적, 일시적,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며, 더 나아가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체제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 기술 공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 참여 정부에서는 지식 정보의 급증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 확보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일시적 전면 개정 체제’에서 ‘수시 부분 개정 체제’로의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역시 이전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문제점을 근거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에 근거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체제 분석

### 가. 교육과정 개발 주도 기구

광복 후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

거나 지원한 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정책 담당 부서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등 연구·개발 기구, 그리고 조선교육심의회, 한국교육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위원회 등 교육과정 정책 심의·자문 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정책 담당 부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기본 계획 수립, 연구·개발 결정, 개발된 교육과정 기준의 고시 등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나. 교육 과정 개발 참여자와 주도 집단

우리 나라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관료적 통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교육부 관료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물리적 통제력을 행사하게 된다(이혁규, 2001). 이러한 관료적 통제 구조하에서 제3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주로 교육부 관리들이 직접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4차, 제5차와 제7차 교육과정이 연구·개발(R&D) 교육과정 개발 체제로 변화됨으로써 연구·개발 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며 다양한 인사와 집단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었다.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와 주도 집단은 교육개혁의 주도 세력, 교육부 교육 전문직 집단, 대학 교수 집단, 교육과정 전문가 집단, 초·중등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집단 등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제7차에 이르는 교육과정 개정을 하는 동안 점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왔다.

#### 다. 교육과정 개발 절차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크게 ‘계획 수립→기초 연구→연구·개발→심의→최종안 선정→확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면 ‘①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② 기초 연구 및 체제 구조 개선 연구의 위탁→③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④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개발→⑤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운영→⑥ 총론 개정 시안 현장 검토, 공청회→⑦ 교육과정 총론 확정→⑧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 고시→⑨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업무→⑩ 새 교육과정 시행’의 과정이다. 이러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0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 라. 교육과정 개발 방식

제1차 교육과정~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부 편수 담당자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부 주도형이었다. 제4차와 제5차, 제7차 교육과정은 연구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 기관이 담당하는 연구·개발형(R&D) 교육과정 개발 체제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 중심의 개발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교육부 주도형에서 연구·개발형(R&D)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육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마. 교육과정 개발 기간

제1~3차 교육과정은 개발을 문교부가 주도한 시기로 연구·개발 기간이 1년 미만이 소요되었다. 이후, 제4차 교육과정은 1년 3개월, 제5차 교육과정은 1년 4개월, 제6차

교육과정은 1년 10개월, 제7차 교육과정은 1년 9개월로 비교적 짧은 연구·개발 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바. 교육과정 개발 주기

교육과정 개발 주기는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개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주기는 제2차 교육과정을 정점으로 점점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이 부분적 소극적 개정이었음과 7차례의 전면 개정이외에도 17차례의 부분 개정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일시적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사.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각 학교에서 원활하게 적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완성하고 고시한 후에도 중앙 정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허경철, 2002). 이러한 적용 실태 분석은 이후의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적용 실태 조사,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조사, 기초 연구, 연구 학교 운영 등이 있었다.

### 3.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체제 개선 방향

가. 교육과정 개발 주체에 따른 권한의 명료화  
우리 나라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기에 와서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식 교육과정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적 교육과정 체제로 진입하였다. 교육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등 세 당사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가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 지역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났는지 여부와 목적, 내용 등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되고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때, 시·도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교육과정 개발 체제로 보이지지 않는다.

교육과정 개발 권한의 분산을 위해서는 분산되는 범위와 한계의 명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산된 교육과정 개발 권한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로서 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과정의 의사 결정 권한의 총화를 증대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 나. 교육과정 관련 세력의 참여 확대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사람들의 협동적인 작업이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구조는 외형상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체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이 모여서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과정 개발 작업은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은 그 필

요면에서나 개발 이후 활용면에서 어떤 다른 개발 기관에 앞서 지금보다도 교육 당사자, 특히 학교나 교원이 그 개발에 다양하게 관여되어야 한다.

#### 다. 교육과정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확립

교육과정 개발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는 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 이들 기관 간의 권한과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 기초한 참여자들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체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관 간 권한의 충돌을 대비하여 기관 간의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고,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다.

#### 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검토 기구의 운영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곳은 단위 학교이다. 결국 교육과정 개발은 이들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현장 적합성이 낮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연구 학교 운영, 현장 교원이 중심이 된 교육과정 현장 검토 위원 운영, 각종 협의회, 공청회 운영 등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이전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비해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수시, 전면 및 부분 개선 방안의 조화

일반적 필요성과 특수한 필요성에 따른 수시, 전면 및 부분 개선 방안이 조화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 주기에 있어 일시적 전면적 수시적 부분적 개정은 어느 특정한 것이 특

별히 우수하다기보다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전면적 일시적 개정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각 교육과정 개발 주기와 범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이 서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절충적인 방법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면 개정 이후에는 부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고, 부분 수정이 수시로 잘 이루어지면 전면 개정은 많이 그리고 자주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바.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험의 축적과 평가에 바탕을 둔 개발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자체의 자기 모순 교정 체제가 없다는 점과 고시되어 시행된 이후 계획적인 질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부터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에 충실한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현행 교육과정 적용 실태 조사, 분석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현장 적합성 높은 질 높은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사. 국가 수준 교육과정 관리 기구의 안정성 확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중앙 부처로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 담당 부서는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시대적 상황,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 축소 개편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직제의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 및 편수 업무 담당자의 수도 1994~1996년까지만 해도 1국 5과 63명(순수 교육과정 담당자는 4과 52명)이었던 것이 1996~2000년에 1심의관 3과 46명(순수 교육과정담당자는 2과 39명)으로 축소되었고, 2000년 이후 현재에는 1과 22명으로 축소되었다(김재복 외, 2001).

이와 같은 교육과정 관련 행정 조직의 잦은 개편과 전문 인력의 감축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져오기보다는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저해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재복 외, 2002).

교육과정이 교육의 본질이고, 핵심 교육 정책임을 상기할 때, 우리 나라 교육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 개선에 앞서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 론

우리 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분석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알아보았다.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직선적이거나 위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상호 작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이 역동적이며 상호 작용적인 방식으로 개발된다는 것은 개발의 과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따라야 할 고정된 계열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김대현,



2002). 이러한 점은 본문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개발 체제 개선 방안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개발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 개발은 절차면에서 정치된 모형으로 이에 대한 이론(異論)도 적은 편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 절차가 결정되면, 각 단계에서 기능을 수행할 인적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교육부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력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교육과정의 개발이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이라 하는 만큼,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이견이 조정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보통 교육과정 심의회 등 공식 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이나, 공청회(협의회) 등 비공식 기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개정안 초안을 인터넷에 올려 약 1년간 광범위한 의견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본은 심의 결과를 일간 신문, TV, 전문지 등의 많은 지면과 시간을 배당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현장 교원, 학자, 학부모 등의 논평과 해설,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을 상세히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 기준 결정권이 중앙에 있는 이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결과의 적용 관련 정책도 이에 적합하게 수립·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육과정 개발 체제 개선

에 중요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능력은 결국 교육과정 개발자의 몫이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총체적, 종합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육과정 개발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24

#### 참고 문헌

- 교육부(1998), 초등 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pp. 77~79.
- 김대현(2002), “교육과정 개발의 개념과 모형”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한국 교육과정학회 편, p. 187.
- 김진락(1992),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체제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한국 교원 대학교, p. 1.
- 김재복(2001), 교육 전문직 자질 향상 방안 및 편수 기능 전문화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답신보고, p. 48.
- \_\_\_\_\_(2002), 편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 연구 과제 2002~지정 25, pp. 16~17.
- 조난심(1999),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p. 16.
- 최호성, “교육 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과정 개발” 교육 이론과 실천(창간호), pp. 186~187
- Bachrach and Baratz(1962),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pp. 947~952.

# 교과용 도서 발행에 따른 저작권법의 이해

■ 글 / 정민택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사무관)



우리는 지금까지 저작권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1997년 7월 이전까지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교과서에 임의로 게재할 수 있었고, 또한 저작권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을 크게 의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 1월 7일 저작권법 제 23 조 제 3 항이 개정되고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없었으나, 게재한 후에는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제 교과서는 저작권 특히 저작 재산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기존의 관념이 깨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본인의 저작물이 게재된 저작권자들은 교과서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을 제대로 몰라 저작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더구나 저작권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앞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몇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게 모르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 I. 저작권의 개요

### 1. 저작권법 제정의 목적

저작권법은 총 10 장으로 본문 112 개조, 부칙 3 개조를 합하여 115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 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편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산업 재산권과 더불어 지적 재산권이라 불린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 이외에 저작 인접권이 있다.**

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 2.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게임,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홈 페이지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산업 재산권과 더불어 지적 재산권이라 불린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 이외에 저작 인접권이 있다.

### 가. 저작 인격권

#### 1) 공표권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 11 조).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 2) 성명 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 12 조).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 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 3)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 할 수 있는 바,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 13 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 나. 저작 재산권

#### 1) 복제권

저작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이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이 직접하거나 또는 타인이 복제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 복제의 개념에는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복제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

축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이다.

## 2) 공연권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또는 시청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연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공연권이다.

## 3) 방송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방송에 이용되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상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음성·음향·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4) 전송권

저작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 때의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 미술 작품과 같은 미술 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 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6)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복제권 외에 배포권이 필요한 이유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 자체를 막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 7)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및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시나리오의 원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영화는 시나리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된다. 편집 저작물이란 개별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백과사전·사전·신문·판례집·직업별 전화 번호부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은 이상 그 저작물의 권리를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집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되는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의 저작자 양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 3.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전파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이다. 저작 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이다.

#### 4. 저작 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순전히 자신만의 창작성 있는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지혜와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일정 부분 활용한 것이며, 따라서 저작권 제도가 애오라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즉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적 창작 활동을 권장하는 한편, 그 보호의 수준을 제한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류 전체의 지식 베이스를 증대시킴으로써 문화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재판 절차나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 ②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복제, 공연, 방송, ③ 비영리 목적으로 반대 급부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 방송하는 경우와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음반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 ④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 ⑥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⑦ 비영리 목적의 시험 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⑧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⑨ 방송 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 Ⅱ. 교과용 도서 관련 저작권법

### 1. 교과용 도서 관련 저작권의 제한

#### 가.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 13조 제 2항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저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고치거나 어려운 영어 단어를 학년의 수준에 맞게 쉬운 단어로 고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란 이 작품이 없어서는 교육상 지장이 있고, 대체할 다른 작품도 마땅히 없어 부득이 당해 작품의 표현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저작 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 23조는 “고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초·중·고등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 경우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탁 제작하여  
게재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 지적 재산권을 양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어느 경우에는 저작권 관계를 분명히 하는 서면 계약이 필수적이다.

면 본래 교육 목적에 필요한 저작물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법은 저  
작권자의 이익과 교육 목적 이용이라는 공익  
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허락은 얻을 필요가  
없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탁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자가 보상금 수  
령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대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용 도서의 게재와 구분  
되어야 하는 개념에 인용이 있다. 인용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끌어다 쓰는 것  
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 25 조는 ‘공표된 저작  
물의 인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공표  
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  
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러한 인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 따  
라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게재와 보상  
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인용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 2.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 게재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이용)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작하여 게재하는 방법,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 게재하는 방법, 이용 허락

에 의한 게재,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게재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첫째,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재하는 방  
법이다.

이 경우 저작권법상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다. 원칙적으로 저작 재산권은 저작  
자에게 있으나, 국정 도서의 경우 집필 약정  
서에 의거 저작 재산권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양도된다.

둘째,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 게재하는 방  
법이다.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 중 일부만을 양  
도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 재산권을 전부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 41 조 제 2  
항에 의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  
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이용 허락을 받아 타인의 저작물을  
교사용 도서에 게재하고 돌려 주는 방법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을 받고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경우는 그  
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저작권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저작물은 이



용 허락 없이 임의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허락을 받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이용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저작권법 제 23조 제 1항에 의한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게재하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 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저작권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해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처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00조 제 1의 2호에 의거 출처명 위반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섯째, 위탁 제작하여 게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가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 관례에 의거 일정한 금액을 주고 저작물을 인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저작권 관계를 분명히 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과 양도받아 게재하는 방법이 있다. 교과용 도서를 집필하는 입장에서는 저작 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포함)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상에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탁 제작에 의하여 게재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방법,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는 방법 등이 있다. 어느 경우에는 저작권 관계를 분명히 하는 서면 계약이 필수적이다.

### 3. 저작권의 행사

#### 가. 이용 허락

저작 재산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이 직접 독립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용 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또는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되며,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우리 부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부에서는 그 사용 목적, 방법 등을 검토하여 무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 이용 허락에 의해 게재된 경우와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게재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출판권의 설정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의 설정은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저작권의 설정적 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그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국정 문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8조(발행자 선정)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정 문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판권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발행 능력이 있는 자를 국정 문서의 발행자로 선정, 약정을 체결한 후 각급 학교에 교과용 도서를 인쇄·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검정 문서의 경우는 검정 신청할 때 이미 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출판권 설정을 한 후에 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9조(발행권 양도의 제한 등) 제1항에 “검정 문서의 발행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과용 도서를 안정적으로 발행·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Ⅲ. 교과서와 관련한 향후 저작권법의 문제(과제)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교육 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단순한 지식의 전달 및 습득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교육 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의 다양한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 교육의 획일적인 서책형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ICT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 교과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6월 25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 교과서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전자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막대한 예산 등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저작권법적인 장애 요소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자 교과서에서는 음악 저작물을 실연한 것을 포함하거나 영화와 같은 영상 저작물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상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저작물의 유형에 음악 저작물의 실연, 영화와 같은 영상 저작물을 포함하고,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며, 현행 저작권법 제 23조 제 2항에 의한 저작권이 제한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주체를 현행법의 교육 기관 이외에 교사와 학생들을 포함하고, 동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저작권에 전시권, 배포권, 전송권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정 이용의 원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4

# 교과서 검정 제도에 관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과 방향

—독일의 관련 관례와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글 /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교**과서 제도는 국가의 관여 정도와 법적 성격에 따라 검정

제도와 국정 제도, 인정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sup>1)</sup>

교육과정이나 교재의 선택에 있어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형태와 방관하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는데, 관여하는 형태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교과서의 저작에 관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의 사용에 관여하는 방법이다. 저작에 관여하는 방법에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통한 직접적 방법과 검정 교과서 제도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 있고, 사용에 관한 방법에는 인정 제도가 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저작한 교과서 이외의 교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고, 검정제는 국가가 사인(私人)이 저작한 도서에 대하여 교과서로서 적부를 심사하여 교과서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인정제는 사인이 발행한 도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제 29 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보면 우리 나라는 국정제와 검정제, 인정제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성격을 논하자면 국정제 위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교과 영역 중에 어떤 교과목을 국정제로 할 것인지와 검정제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어떤 과목을 국정제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검정제의 경우에도 그 운영에 관해서 국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에 개선에 시사점을 찾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독일의 교과서 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특히, 그 검정 제도

자체의 합헌성 여부와 법적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 2. 교과서 검정 자체의 헌법 적합성 여부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주 사회적 법치 국가를 지향하는 본(Bonn) 기본법 이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사인에 의한 교과서 출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 교과서 검정과 채택 제도,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그 검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그렇다면 이러한 검정 제도에 대해서 독일 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971년 헛센 주 행정 법원은 교과서 검정 자체의 헌법 적합성(Verfassungsmäßigkeit)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동 법원은 그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방법과 절차에 일정한 조건을 과하고 있다. 동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sup>5)</sup>

교과서 검정 절차는 그 자체로서는 위헌이 아니다.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가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권리는 기본법 제7조 1항 및 헛센 주 헌법 제56조 1항으로부터 도출된다. 기본법 제5조 2항은 법률에 의한 출판의 자유(Pressefreiheit)의 제한의 한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출판의 특권 혹은 출판의 일부의 특권 부여(예컨대 교과서 검정)는 기본법 제3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1973년에는 연방 행정 법원도 같은 취지의 검정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sup>6)</sup>

연방 행정 법원은 국가의 학교 감독권 개념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하여 일관된 판결을 해 왔다. 이 개념은 학교 제도의 조직, 계획, 지도 및 감독을 위한 국가 권한의 총체로 파악된다. 기본법 제7조 제1항의 테두리 내에서의 국가의 교육 형성 범위에는 교육 목적을 확정하고 교육 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교과서가 교육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권도 이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교과서가 공립 학교에서의 수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기본법 제7조 1항에 의해 이전부터 교육고권(教育高權, Schulhoheit)의 담당자로서의 국가에 인정된 권한이다.

이상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독일 법원은 교과서 검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은 이 검정으로 인한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의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3. 교과서 검정 제도의 법적 규제 여부

교과서 검정 자체가 합헌이라고 해서 그 정도와 방법, 절차 등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교과서 제도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출판사의 언론 및 사상의 자유와 저자의 지적 소유권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교육과정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업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개 국가의 권한의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7)</sup>

문제는 교과서 검정 제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의회의 통제, 다시 말해 법률의 규제를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부 자체적으로 행정 규칙을 만들어 그것에 의하여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도 보았지만 합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법률에 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법부가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행정부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1) 검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제안한 법안의 사례

1981년 독일 법률가 회의의 학교법 위원회는 ‘통일 학교 법안’에서 교과서 검정 절차의 법적 규제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교과서 검정은 발행인의 학문적 자유 및 저자의 정신적 재산권을 현저히 제약하며 개개 교사의 교과 수업에 가장 중요한 내용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제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위원회는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비중과 맞먹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따라서 그 검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전달되는 지식, 능력 및 가치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이 위원회가 제안한 안은 다음과 같다.<sup>8)</sup>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에는 그것이 문교부 장관에 의해서 검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검정은 교과서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과 일치하고, 기존의 법규(Re-

chtsvorschriften)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구판을 개정한 신판 교과서(Neuanflage)는 그것이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개정됨으로써 구판의 계속 사용을 배척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때에만 검정이 거부될 수 있다.

종교 수업을 위한 교과서는 교리(Glaubenssätzen)와의 일치를 위하여 교회 혹은 종교 공동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문교부 장관이 교과서의 검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검정에 있어서의 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교과서 내용이 ‘본질적으로’(im wesentlichen) 교육과정과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치의 정도이다. 이 법안은 교육과정과 ‘본질적’으로만 일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엽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한 양자 사이의 완전한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일치를 요구할 경우 교과서 발행에 있어서 그 수정과 증보가 너무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교과서 검정의 결과 교육과정과 내용이 상충되는 교과서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9)</sup> 그러나 학교법 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당시 각 주 당국의 태도는 시큰둥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 (2) 검정 제도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지지하는 판례

독일에서 교육법을 많이 연구한 뵘(Boem)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법률가 회의의 학교법 위원회(Die Kommission Schulrecht des Deutschen Juristentages)의 제안을 주 당국자가 거부한 사실을 들면서, 앞의 학교법 위원회는 이 문제를 순수하게 이론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아 검정 기준을 완화하되 그것을 법으로 정하여 법률의 통제하에 둘 것을 주장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 검정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라는 점을 살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 문제를 즉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통제보다는 당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행정 고등 법원도 교과서 검정 절차를 법률에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행정부가 교과서를 검정할 때의 합격 여부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1)</sup>

교과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학교의 교육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일치 정도를 완전한 데에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며 본질적인 측면에서만 일치하면 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즉 국가는 교과서가 …(중략)… 국가의 교육 목적(Staatliche Erziehungsziele)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 경우 실제 수업시 학생의 손에 교과서를 투입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 당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1988년의 연방 행정 법원은 이것과는 반대로 다시 앞의 학교법 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검정 제도의 법적 규제를 지지하

였다.

### (3) 1988년의 연방 행정 법원의 관례

연방 행정 법원은 주(州)에서 검정한 김나지움(Gymnasium)의 중급 단계에서의 독일어 수업 교과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신좌파(Neuen Linken)’의 해방 교육(emanzipatorischen Padagogik)의 가치 관념에 바탕을 두고, 사회 현실과 노동 세계를 가능한 한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연방 공화국에서의 사회 및 정치 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정의 법적 규제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12)</sup>

……교육 행정 관청은 학교 수업에 사용할 교과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중립성(Neutralitat)과 관용(Toleranz)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당파적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국가적 중립성과 관용의 원칙이 기왕에 발간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정치 교육적인 측면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세계관(Anschaungen), 즉 여기에서 ‘해방 교육(Emanzipatorische Padagogik)’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교과서가 이러한(헌법)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고 담당 교사가 이러한 흠결을 보정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그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 독일의 관례와 학교법 위원회의 법안



등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교과서 검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연방 행정 법원이 최종적으로 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 4. 맺음말

1992년 헌법 재판소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sup>13)</sup> 그 논거는 국가가 공교육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한 그것을 국정제로 할 것인지, 혹은 검정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비록 국가가 형편에 따라서 일부 교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가 적은 비인기 과목이기 때문에 국정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정제가 적용되고 있는 과목 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민주 시민 교육과 직결되는 과목들로, 예컨대 초등 학교의 전 교과목과 중학교의 도덕, 국사, 국어 과목, 그리고 고등 학교의 윤리, 국사, 국어 과목 등이다. 이것들은 검정제 혹은 인정제로 전환하여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정제 유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 재판소는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보지 아니하고, 단지 국가가 교육 내용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만으

로 입법자에게 그것의 구체적 제도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 형성의 체계를 간과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국정제의 문제가 아니라 검정제의 헌법 적합성 문제가 법원에 제기된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교과서 제도에 관한 헌법 논쟁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상에서 본 바대로 독일의 경우 교과서 검정 제도를 현실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 이것을 법률로 할 것인지, 행정부의 재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지지하였지만, 결국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검정에 관한 대강의 기준 자체를 법률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이르고 있다. 이 점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검정 기준에 관해서 법령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한 바가 없다. 초·중등 교육법 제 29조 제 2항은 교사용 도서의 범위와 국정 및 검정, 인정 제도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sup>14)</sup>

혹자는 이러한 위임도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반문하겠지만, 필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앞의 독일 법률가 회의의 학교법 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예컨대, “검정은 교과서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과 일치하고, 기존의 법규(Rechtsvorschriften)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대강의 기준은 적어도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가령 국정제의 경우에도 국정제를 해야만 하는 과목과 요건 정도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1) 교육부, 헌법 재판소 판례집 I, 1992, 195면에 소개된 헌법 재판소, 1992. 11. 12, 89 헌마 88 심판 청구 기각 결정.

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조 ①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검정 도서) 검정 도서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 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 17 조 (인정 도서의 사용 범위 등) ②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 조 (국정 도서)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4) 김도창, 일반 행정 법론(상), 청운사, 1992, 400 면 참조. M. Rehbor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과서 심사의 법적 성격을 특허에 유사한 것(Konzessionsähnliche Charakter)으로 보고 있다(M. Rehborn, "Rechtsfragen der Schuluchprüfung", Fanz Vahlen, München, 1986, S. 37). 독일에서의 교과서 제도의 검정 및 채택 절차와 양자의 관계, 심사위원의 심사 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W. Muller, a. a. O., SS. 201-204 ; M. Rehborn, a. a. O., SS. 57-64 참조.

5) VGH Hes, Kassel, 8. 6. 1971, II OE 71/70 (nicht rechtskräftig) in : SPE 702, S. 1f.

6) BVerwG, 13. 3. 1973, VII-13-107, 71, in : SPE 702, S. 1.

7) H. Heckel u. H. Avenarius, a. a. O., S. 171 ; Lutz Dietze, Verfassungsfragen lernzielorientierter Curricula, DVBl. 1975, S. 390.

8) Bericht der Kommission Schulrecht des Deutschen Juristentages : Schule im Rechtsstaat, Band I, Entwurf für ein Landesschulgesetz. München 1981, S. 177 f.

9) Bericht der Kommission, a. a. O., S. 178 f.

10) T. Böhm, a. a. O., S. 59.

11) OVG NW, Münster, Urteil vom 27. 9. 1985, 5 A 201/81 in SPE 702, S. 2ff.

12) BVerwG, Urteil vom 3. 5. 1988, 7 C 89/86 in : SPE 702, SS. 8, 10 ; T. Böhm, a. a. O., SS. 33-35.

13) 교육부, 헌법 재판소 판례집 I, 1992, 195면에 소개된 헌법 재판소, 1992. 11. 12, 89 헌마 88 심판 청구 기각 결정.

14) 그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검정 기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동 규정 제 9 조가 '검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 단계와 심사 항목으로서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검정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 제도·교육 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 『교과서연구』

##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 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보내실 곳 :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otri.re.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01-9103으로 문의

## 캐나다 현지에서 본 우리 나라의 조기 유학

■ 글 / 서성진 (주 캐나다 한국교육원 원장)



캐나다 연방 이민국은 주재국 내 우리 나라 유학생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02년 12월 1일 현재 한국으로부터 온 유학생 수를 총 24,575 명이라고 답해 왔다. 이 중 University (4 년제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은 석·박사 과정 572 명을 포함하여 3,587 명 (14.6%)이며, College (2, 3 년제 전문 대학) 유학생은 6,860 명 (27.9%)으로 나타나 있다. College 유학생 수가 University 유학생 수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캐나다의 학제는 우리 나라와 달리 K(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를 초등, 9~12학년을 중등 교육 과정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나라 유학생은 초등에 3,146 명, 중등에 6,207 명으로 이른바 조기 유학생은 공식적으로 9,353 명 (38.1%)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9년 이후 우리 나라 유학생 수 추이를 보면, 1999년 11,281 명, 2000년 15,913 명, 2001년 20,932 명으로 3년 사이에 118%의 놀라운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학생 수 증가는 조기 유학생 (초등 학교 288%, 중등 학교 186% 증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 기본법의 자비 유학에

관한 규정에서는 중학교 (9 학년) 이하인 자의 자비 유학을 제한하고 있어, 캐나다 내에는 불법 조기 유학생은 3천 명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학의 내용과 질에 대한 논의도 간과할 수 없다.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 체제 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배울 수 없는 첨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유학의 기본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기 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장차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녀를 이민하고자 하는 나라에 미리 보내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기 유학생들은 언젠가 우리나라로 돌아가 우리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며, 그들의 미래는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초·중등 학교의 보통 교육에 있어서 선진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은 자국민을 위한 것일 뿐, 맞춤형 유학 코스는 아직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진국의 환경과 가치관은 우리 나라와는 확연히 다르며, 국가 수준의 교

육 목표와 추구하는 인간상 또한 우리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청소년 시절 폭넓은 인성 교육이 중요한 시기에 남의 나라에서 남의 것을 익히며 자란 아이들이 훗날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 시절 읽어야 할 수많은 필독 도서와 우리 나라 고전, 우리 나라 역사와 법률, 전통 문화와 국토 지리, 그리고 이 나라 학교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수학과 물리, 화학 등 과학 교과 의 기초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 장차 한 국민으로서 몸에 배어 있어야 할 예의 범절과 윤리관, 가치관 등은 어떻게 익힐 수 있는 것인가. 조기 유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학한 나라로 결국은 이민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인가.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다. 국내 공교육의 붕괴와 희망 없음이 분노와 허탈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었음을 인정한다.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나라에서 공부시키기에는 너무나 황폐해 버린 학교 현장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에 부득이한 선택임을 이해한다. 엄청난 유학 비용과 장래에 대한 보장도 없이 부모들은 가정 파괴의 위험까지 감수해 가며 자녀들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음을 안다. 출신 대학의 타이틀이 인간에게 낙인이 되는 사회, 그로 인해 취업은 물론, 결혼 상대자의 서열이 정해지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내 자녀가 장차 큰 일을 할 아이가 분명한데도 청소년 시절 웬지 공부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 부모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 매우 이성적이어

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 제도에 대한 분노와 외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자녀들의 조기 유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많은 조기 유학생과 그 가족들을 공·사적으로 만나고 있다. 비정상적인 가정의 구도나 가족 관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되었거나 완벽하게 옳은 것은 없다. 어떤 현상이든지 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나타난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교육 문제를 마술로 풀 수 없으며, 나만의 비방으로 혼자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교육은 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무너진 우리의 학교를 바로 세우자. 나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기엔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한두 사람씩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조기 유학이 국가 교육 개혁에 있어서 누수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힘 모아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김을 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조기 유학을 보내지 못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패배감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좀더 냉철하게 조감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들도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변화가 추진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육 개혁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나라들의 교육 개혁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경영 논리에 입각한 예산 줄다리

**우리의 교육 문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로 삼을 필요는 있겠지만, 선망하며 맹종하려는 자세는 오히려**  
**판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행정 비용의 최소화와 성과의 극대화, 투입한 예산 대비 학생들의 학력 고사(Literacy, Math) 점수가 교육 개혁이 초점이 되고 있다. 학년별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 셈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일제 고사 결과가 교육계의 최대 관심 사항이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일제 고사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나라에도 학원이 있고, 과외가 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상위에 있어야 하고, SAT 시험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우리 귀에 익은 미국과 캐나다의 우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하고, SAT 성적이 최소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선진국에도 치열한 입시 경쟁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부유층이 다니는 유명 사립 대학에는 기여 입학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립 대학들은 성적을 가장 중요한 입학 사정 자료로 삼고 있다. 최근 북미 대륙에서는 이와 같은 경쟁에 익숙한 동양계 학생들의 명문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 강력하게 추진했던 교육 개혁 정책의 하나인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은 학력 신장에 실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학교에 줄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를 사립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돈을 놓고 공교육의 붕괴를 선언한 셈이다.

1995년 시작된 우리 나라 교육 개혁은 그 바탕이 한 차원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더 이상 문맹이나 기초 학력 부진이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 개혁은 다가올 다음 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구조와 내용을 점검하고 새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 문명의 여명기에 우리는 국가 경영에서 실패했었고, 그로 인해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탈을 받았다. 처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감내해야 했다. 얼마나 쓰라린 경험인가. 만약 다시 한 번 문명이 전환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가 남다를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였다. 자원과 자본이 국부를 가늠하던 산업 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국민의 지식 수준이 국가의 역량을 결정하게 될 지식 정보화 문명이 코앞에 와 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전환을 감지하고, 다음 문명 시대를 맞이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을 끄집어 내어



풀기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교실의 파괴요, 공교육의 붕괴 현상인지 모를 일이다. 만약 우리가 이 난국을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다가올 새 문명 시대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실제로 2002년 OECD는 우리 나라의 교육 제도에 대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초·중등 학교의 학습량은 우리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연간 수업 일수가 220일 이상인 우리 나라에 비해 180일 수준이며, 일과도 아침 9시에 시작해 오후 3시면 모두 끝난다. 캐나다 고등 학교 학생이 하는 공부의 양은 우리 나라 고등 학생이 하는 공부의 양의 절반도 안 되어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공부를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문제인가. 우리 나라와 같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선진국 초·중등 학교 학생들은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유학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와서 2, 3년을 지낸 학생이 이 나라 학생들처럼 많은 독서와 이상적인 과외 활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몇몇 예외적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유학생들은 너무 높은 언어 장벽과 외로움, 부모와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서적 결손 등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결코 득될 것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영어 한가지만이라도 익히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겨우 생활 영어를 익히기 위해 청소년 시절을 송두리째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어린 나이에 사랑과 정성어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외국에서 지식과 교양이 스며 있는 고급스러운 영어를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조기 유학생들이 구사하는 한두 마디의 생존 영어는 서울의 학원가에서 한두 달이면 익히기에 충분한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조기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쉬운 문학 작품의 번역이나 간단한 비즈니스 통역을 시켜 보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 문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로 삼을 필요는 있겠지만, 선망하며 맹종하려는 자세는 오히려 판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 나라의 현실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자. 미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이 우리 나라와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나라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 엄청난 돈을 들여 꾸려 가고 있는 미국의 교육 현장도 나름대로의 허점이 드러나 개혁의 쓴잔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기본 정신만은 옳르게 배워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 글 / 최봉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상무이사)



‘중 학 국어 교과서 오류투성이, 맞춤법 잘못 등 1,000여 곳(동아 일보)’,  
‘맞춤법도 못 맞춘 국어 교과서, 중학교 1, 2학년용 띄어쓰기 등 1,000 건 오류(중앙 일보)’

지난 가을,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되었던 보도 내용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때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모른다. 세상에 천 군데나 틀렸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교과서라고 해서 완전무결한 것은 물론 아니다. 열 번을 보고 또 보아도, 오자(誤字)는 내내 숨어 있다가 나중해야 학생들의 눈에 띄어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일은 그놈이 저질렀는데 망신은 내가 당하니 억울하지만, 변명이 통하질 않으니 그저 참고 푸념이나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활자(活字)는 글자 그대로 살아 있는 글자인가 보다 하고.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수정이 필요한 곳은 국어 교과서 4책을 모두 합해서 한 삼십여 군데 되었다. 이 정도면 매년 수정, 보

완해 오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틀렸다고 지적한 ‘우리 나라’, ‘그 때’, ‘초등 학교’, ‘이 날’ 등등의 낱말은 띄어 써야 옳다(한글 맞춤법 42, 46, 49 항). 하나라도 틀린 건 틀린 것이고, 그래서 교과서 편집·출판 담당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면목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 확인도 없이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는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눈앞이 아니라 멀리 보아야 한다. 이렇듯 백년대계를 해야 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 정책과 함께 교육·학습 자료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는 가장 잘 정련되고 다듬어진 교육 자료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겠지만, 종종 교과서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비난은 교과서 내용상의 오류나 표기 문제에 집중되지만, 그 목적이 좀더 충실한 교과서를 바라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교과서 개발 체제에 관한 형식과 내용이다.

## 교과서 편찬 예산과 전문 편수인력 확충해야

현재 국정 교과서 개발비는 검·인정 교과서의 17.5% 수준인 책당 평균 3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예산에 맞게 일할 수밖에 없으니, 개발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한 것은 그대로 남는다. 교과서 그림들이 대부분 시중의 참고 도서들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좋은 화가들은 많지만, 교과서 그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간단하지도 않으면서 고료도 낮으니, 교과서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손부터 내젓는다.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되는 것은 때로는 애국심에라도 호소하는 개발자의 열의 덕분이고, 영리를 버린 화가의 2세 교육에 대한 기대 덕분이다.

또 하나는,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의 전문 편수 인력의 부족이다. 교과서 편찬이 그야말로 교육부의 당면 과제였던 우리 교육의 초창기를 떠올릴 것도 없이 10여 년 전만 해도 어엿이 편수국이 자리했고, 교과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편수관의 손길이 닿았었다. 시대가 달라졌고, 교육부의 기능도 변화해 간 것이야 당연한 현상이었겠지만, 모든 교과서를 검정 도서나 인정도서, 혹은 자유 발행 도서로 개발하는 선진국들도 교과목별 교과서 정책만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이웃 일본은 그 인원만 해도 100 명이 넘는데, 우리의 경우 오늘날 공업 계열의 편수 담당자의 경우 혼자서 208 책을 검수하고 있는 형편이라니 아무래도 교과서가 홀대당하고 있는 느낌이 다. 형편이 그러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육부, 개발 기관, 교과서 발행사에서는 주어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교과서를 개발, 생산, 공급하여 왔다고 나는 자부하는바, 교과 내용의 일부 표현·표기만을 문제삼아 요란하게 떠들어 대면 어찌겠는가.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철저히 반성해야겠지만, 무턱대고 손가락질부터 해서야 어찌 일할 맛이 나겠는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과서 일은 잘해 봐야 본전’이란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 살펴보았으면 싶다.

## 교과서의 수정, 증보(增補)가 기능적으로 작동되어야

교과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또 보충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바꿀 필요가 생기면 발행출판사는 개발 기관의 연구, 검토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재발행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매년 되풀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개발팀이나 출판사 편집팀은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라 하더라도 다시 새 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의 수정이 무의미한 교과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견된 문제들만 출판사에서 수정하여 끝내기보다는 개발 기관에서도 꾸준한 관심으로 더 충실한 교과서가 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4년, 5년 배운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오류는 발견되고 있다. 일반인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고등 학교 전문 교과(실업 계열)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매년 새로

교과서는 한 번 만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요는, 개발 기관은 개발 기관 대로  
역할이 계속되어야 하고,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전문 편집자 그룹이 존속되어야 한다.

운 통계 자료나 수치의 업데이트는 물론이려니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기계 기술의 변화 주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재집필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는 한 번 만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요는, 개발 기관은 개발 기관대로의 역할이 계속되어야 하고,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전문 편집자 그룹이 존속되어야 한다. 수정을 하려고 해도 사람(해당 부서)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는 교과서가 있어서야 될 말인가. 컴퓨터가 윈도우 환경으로 바뀐 지가 오래데도 아직 도스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라면 교과서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고물딱지일 뿐이다.

#### 교과서와 관련한 다양한 멀티 자료가 개발, 보급되어야

종이를 매개체로 한 교과서는 종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제아무리 내용과 디자인이 잘 된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벌써 멀티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 일부 과목에는 CD-ROM이나 녹음 테이프 등이 함께 제공되어 시청각 교육이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멀티 학습 자료를 별도로 개발, 에듀넷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교과서의 수준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다양화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저 그런 빈약한 자료들로 교과서 따라하기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를 보고 형편에 따라 맞추어 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형식적이지 않을 수 없다. 멀티 자료가 교과서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져야 한다.

요즘은 코앞에 닥친 교육 시장 개방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모양이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다 일리가 있을 것이다. 나 스스로가 여기에 무관할 순 없을 터이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둔 논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든 간에 곁에 드러나보이는 것만 놓고 침소봉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문제가 된 원인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3

## 국가의 생존 차원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

■ 글 / 양승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都市國家)이다. 국토 면적이 서울보다 약간 넓은 683 km<sup>3</sup>이고, 인구는 400만(2000년)이 조금 넘는다. 중계 무역항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일찍부터 식량과 채소류 등 일상용품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초 자원인 물과 모래도 수입 대상 품목이었다.

1965년 독립 이래 싱가포르의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와 공업 용수의 거의 전량을 말레이시아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용수 공급으로 인한 분쟁이 잦아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말라카 해협 건너편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리아우(Riau) 주로부터 싱가포르를 잇는 총 연장 480 km의 해저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산이 없다. 모두 깎아서 바다를 메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안 매립 사업은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 배후 시설 확대라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계속해서 인접 도서로부터 방대한 양의 모래와 자갈을 사들이게 하고 있다.

물과 흙을 사들여야 하는 무자원(無資源)

의 나라 싱가포르의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인적 자원 육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인력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21세기 고도의 지식 기반 사

회가 도래하면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것도 단순한 고학력의 대학 교육에 의해서 정형화된 사람이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냉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창의력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인적 자원’이 필요해진 것이다.

고척동(吳作棟) 수상은 2000년 8월 독립 기념일의 연설을 통해서 “혁명가(revolutionaries)나 반란자(insurgents)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제 단순한 모방으로는 퇴조할 수밖에 없고 창의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만 한다.”고 선언하였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일자리와 기술 수준의 불일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실업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국가 차원의 인력 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 교육의 기본 목표를**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사회 민주주의 이상에 맞추었다.**  
**즉,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을 훌륭한 시민이자 쓸모 있는 국민으로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가까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98년 4월에 노동부를 인력부로 개편하고, 같은 해 8월에 21세기 인력 개발 종합 계획인 'Manpower 21'을 내놓았다.

Manpower 21은 국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력 개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부·기업·학계와 주요 사회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입안한 21세기 국가 교육 청사진이다. 이것은 미래의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기술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실업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듯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인적 자원의 질적 고도화에 노력해 왔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출현과 함께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등장하게 되자, 싱가포르는 국민 개개인의 지적 수준 향상과 창의력 계발(啓發), 그리고 고급 두뇌 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 교육의 기본 목표를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에 맞추었다. 즉,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을 훌륭한 시민이자 쓸모 있는 국민으로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가까이 참여하도록 하고, '쓸모 없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는 국민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다. 이 나라의 교육 예산은 지난 10년간 3배가 증가하

여 1990년의 20억 싱가포르 달러(1조 5천억원)에서 2000년에는 60억 달러(4조 5천억원)로 늘어났다.

싱가포르 정부는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학령 미달 아동을 상대로 하는 유아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초등 학교 입학 아동의 거의 100 퍼센트가 거치는 유아 교육은 유치원이나 보육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유아 교육 기관은 대부분이 사립인데, 국가로부터 운영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교육 내용과 운영을 정부가 감독한다. 교육 연한은 1~3년인데 3세까지는 보육(탁아), 4세와 5세는 각각 유치원 1년과 2년생이다. 유치원 과정을 마치면 학령 아동(6세)이 되어 초등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정부의 초기 교육 정책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4시간씩 행하여지는 유아 교육에서도 언어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과정도 영어로 지도하며, 만다린어(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인도어) 등 출신 종족별 고유 언어 훈련에도 비중을 둔다. 이 밖에도 공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자제력 기르기·청소·정리 정돈 등과 음악과 유희 등을 통한 창조적 능력 향상을 꾀하며, 기본적인 수리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미래의 산업 인력 수급(需給) 전



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먼저 통상산업부가 향후 5년 후의 산업 인력 수급 전망을 판단하여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는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국가 장래의 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 수준과 일자리가 일치되어 당연히 비싼 교육 훈련을 받은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싱가포르의 교육이 유아 교육부터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교육의 평준화(平準化)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재 교육을 강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능력 우선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서도 실적주의(Meritocracy)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관유(李光耀)의 장남이자 고척동에 이어 차기 수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리시엔룽(李顯龍) 제 1 부수상은 ‘민중주의·획일적 평등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엘리트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국가의 열등화(劣等化)와 사회의 하향(下向) 평준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망국(亡國)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생존 차원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교육과정은 걸러내기(streaming-out)로 알려진 우열반 편성을 위한 시험 성적에 따라 상급 학교로 진학 예정자와 예비 취업자로 구분된다. 초등 교육은 4년간의 기본 과정과 2년간의 적응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 과정이 끝나는 4학년 말에 싱가포르의 모

든 초등 학교 어린이들은 국가에서 행하는 걸러내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향후 엘리트 교육과정으로 나갈 학생과 직업 교육과정으로 나갈 학생이 갈라진다.

초등 학교의 ‘걸러내기’ 시험 과목은 영어·수학·제2외국어인데, 이 중 언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영어를 종족어처럼, 종족어를 영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엘리트 코스가 보장되는 것이다. 첫 번째 걸러내기 시험 결과에 따라 3분류의 우열반 학급 편성이 이루어진다. 학급 편성 후 성적이 향상되면 물론 우수 학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두 가지 언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상위 성적의 60퍼센트가 진급하여 졸업 시험(PSLE)에 합격하면 중등 학교에 진학한다.

두 언어 구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중위 성적 20 퍼센트의 학생들은 초등 학교를 2년 더 다닌 후 졸업 시험을 거쳐 합격자는 중등 학교에, 불합격자는 직업 훈련원으로 배정되어 직업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위 20퍼센트의 중등 교육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은 첫 번째 걸러내기 시험 후에 종족어 교육에 중점을 둔 8년간의 초등 학교 교육을 끝으로 직업 훈련원으로 보내져서 일찍부터 직업 교육을 시킨다. 이들 직업 교육 이수 해당자들에게는 직업 의식을 고취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啓發)하며 국가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등 교육 기간은 4년인데, 초등 학교 졸업 시험 성적에 따라 상위 성적 6퍼센트의 특별 이중 언어 과정(SBC)·중위권 성적 60퍼센트의 신속 이중 언어 과정(EBC)·나머지 하위 성적의 보통 이중 언어 과정(NBC) 등

싱가포르는 21세기 지식 산업의 변화에 걸맞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 패턴을 도입하였다. 1997년부터 '생각하는 학교와  
 배우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사고력·  
 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3분류하여 학교에 배정하고 성적 향상에 따라 코스 이동이 가능하다. 이 중 SBC나 EBC 코스 진학생들은 4년 후 중등 학교 졸업 자격 시험(GCE O level)을 볼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보통 이중 언어 과정의 진학자는 4년 과정을 마친 후 중등 학교 수료 시험(GCE N level)을 보아 성적 우수자는 중등 학교 5학년으로 진급하고, 성적 미달자는 직업 훈련원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중등 학교 5학년 수료자는 졸업 자격 시험(GCE O level)을 거쳐 다시 상급 학교 진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등 교육은 GCE O level 성적 우수자에게는 2년제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에서, 성적 보통자는 3년제 폴리테크닉(Polytechnic)에서 준(準)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며, 성적 미달자는 직업 훈련원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등 교육 수료자는 졸업 자격 시험(GCE A level)을 거쳐 성적에 따라 3년 내지 5년 과정(의과 대학)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택하게 된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국립 싱가포르대(NUS)·남양 공대(NTU)·싱가포르 경영대(SMU)·국립 교육원(NIE) 등 4개의 대학 교육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교육 제도를 뒷받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우수 교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 투

자하고 있다. 교원 양성과 현직 교원의 다양한 교과 내용 연수는 남양 공대 부설 국립 교육원에서 이루어진다. 국립 교육원은 GCE A level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의 학사 학위 취득 과정과 GCE A level 합격자와 폴리테크닉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2년제 교육디플로마 과정이 있다. 또한, 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초등 및 중등 교원 양성을 위한 1년간의 교육디플로마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싱가포르 교육의 산실인 국립 교육원은 나아가서 인문학·교육학 및 제반 과학 분야의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도 병설하고 있다. 현직 교원의 연수 과정으로 국립 교육원은 상급 자격 획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 10년간 초·중등 교사 중 대학원 졸업자가 31 퍼센트에서 53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싱가포르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 예산 확충으로 같은 기간 내에 교사와 학생의 비율도 초등학교는 1:26에서 1:25로, 중등학교는 1:22에서 1:19로 줄었다. 또, 1999년부터는 모든 교육 시설의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약 60 퍼센트가 개선되었고, 2005년까지 100 퍼센트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립 교육원은 또한 정부의 대대적인 장기

지원으로 초·중등·고등 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교재를 심의 제작하여 배포하며, 이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막강한 권한의 상설 심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싱가포르 정부는 21세기 기술 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유아 교육 시기부터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초등·중등 학교의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장학 기금을 마련하여 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시책은 신선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오늘날 싱가포르 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이다. 1996년 전세계의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과학 경시 대회에서 싱가포르 학생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1999년 경시 대회에서도 싱가포르는 수학 분야에서 1위를,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국제 사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1세기 지식 산업의 변화에 걸맞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 패턴을 도입하였다. 1997년부터 ‘생각하는 학교(Thinking Schools)’와 배우는 국가(Learning Natio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초등 학교와 중등 학교의 수업 시간을 전체적으로 10 내지 30 퍼센트를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학생들은 여유 시간을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교과목과 야외 탐

험·작문·사진 촬영 등 다양한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 방식도 기존의 교사들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이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3~5명씩 조를 이루어 팀워크(teamwork)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지금까지는 우수한 학업 성적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미국식의 수학 적성 시험(SAT) 성적·프로젝트 성취도·과외 활동 실적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나아가서 싱가포르의 각급 대학들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해외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유능한 외국인 교수의 채용 확대와 세계 일류급 외국 대학과의 전략적 제휴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교육 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리관유재단(Lee Kuan Yew Foundation)이나 고켁췌재단(Goh Keng Swee Foundation)은 해외로 향한 우수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명문대 출신의 명문가(名門家)의 자녀들로 세계와 겨루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예비 지도자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재단이 지원하고, 이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여, 가족들과 함께 해외 이민길에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생존 차원의 인재 양성인 셈이다. ㉠

# 지리과의 신민「교육과정」



■ Lee / 리홍기 (정기교육과정부장)

1945년 광복과 함께 우리 나라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인(日人)들로부터 교육 운영을 떠안게 되었다. 교육과정이란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 미 군정청에서 내놓은 교수 요목으로 시작한 광복 후의 우리 나라 교육은 그 이후 관계자들의 노력과 새로운 학문적 조류의 유입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으며, 그 때마다 개정한 교육과정에 이론적 및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체계를 갖추며 발전해 가는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지리 교육에서도 196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HSGP(High School Geography Project) 운동의 영향도 받으면서 교육 내용의 개선 노력을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해당 학문 영역과 교과 교육학적인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나라 지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보잘것없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도 자연히 과거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썼던 내용을 별 생각 없이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작은 관심이나마 가지고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에 광복 후 40년 가까이 되도록 우리 지리 교과서에 일본 식민교육의 잔재가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도처에 버젓이 자리잡아 교육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82년 문교부 편수관실에 발을 들여놓은 필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전년도에 고시된 제 4 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물론 교과서 개발의 실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였지만 문교부의 각 교과 담당 편수관이 개발의 전체적인 방향과 기본 지침을 제시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하고, 또 2 종 교과서의 집필 방향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답

당 편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필자는 평상시 구상했던 몇 가지 사항 이외에도 그 동안 늘 생각해 왔던 일제 식민 교육 잔재 청산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고심했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편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기에 그 사례를 소개한다.

## 1. ‘벚꽃 개화일 등치선도’를 ‘개나리 개화일 등치선도’로 교체

우리 나라는 동서가 좁고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어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가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제 시대부터 벚꽃 개화일 등치선도가 지리 교과서나 지리 부도에 수록되었었는데, 광복 후 몇십 년이 지나도록 별 생각 없이 이를 계속 수록해 온 것이었다.

물론 벚꽃의 자생 원산지가 우리 나라라고는 하지만 벚꽃은 일본의 국화이며, 벚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지극히 일본적인 정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벚꽃 개화일 등치선도가 수록되었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벚꽃보다는 개나리나 진달래가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느낀다. 벚꽃에 관심이 쏠린 것은 일제 시대에 창경궁(일인들이 창경원으로 격하시킴.), 서울의 남산, 경남 진해 등 전국에 걸쳐 여러 곳에 벚꽃 단지를 조성하고 분위기를 띄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정서에 맞춰 개나리나 진달래 개화일의 등치선도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학문적 근거 없이 글자만 ‘벚꽃’을 ‘개나리’로 바꾸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개나리나 진달래 개화일에 관한 연구 성과가 있는가를 백방으로 찾아 보았다. 산림청, 대학, 농촌진흥청 등 관계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조회해 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밥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어디 가면 관련 연구 성과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짹 찼다. 그러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교과서 적기 공급을 위한 생산 일정상 교료 사인을 놓아 출판사로 넘겨야 할 시한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못하고 그대로 수록되어 왔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끝없는 실망 속에서 헤어나 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일이면 시정을 못한 대로 교료 사인을 놓고 출판사로 넘겨 생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낙담한 상태에서 집에 있는 서재에 홀로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서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많은 책 중에서 한 책에 시선이 멈추어졌다. 기상대에서 발간한 「한국의 기후」라는 책이었다. ‘혹시 저 책 속에……’. 부리나케 일어나 그 책을 뽑아 뒤져 보았다. 있었다. 드디어 찾아낸 것이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것을……. 뭇 듯이 기뻐다. 아르키메데스가 그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도 이랬을까 싶었다. 그 동안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서가의 책을 뒤졌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일본에서조차 ‘支那’라는 한자 표기를 없애고 음(音)만 따서 일본 글자인 가나로 ‘シナ(시나)’라고 쓰는 상황인데 엉뚱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만 몇십 년 동안 무신경하게 ‘지나(支那)’라고 써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용 도서를 위한 편수 자료에서 ‘동 지나해’, ‘남 지나해’를 ‘동 중국해’, ‘남 중국해’로 고치고 교과서와 지리 부도에서도 고쳐 쓰도록 하였다.

는데, 왜 이 책이 눈에 안 띄었을까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근거를 찾았으니, 다음 날 즉시 ‘개나리 개화일’ 등치선도로 교체하여 교료 사인을 놓고 생산 지시를 하였다.

## 2. ‘동 지나해’, ‘남 지나해’를 ‘동 중국해’, ‘남 중국해’로

지나(支那)라는 표현은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에 음역(音譯)되어 나타난 경우가 있다. 고는 하나 원래 고대 중국의 진(秦)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China, Cina, Thin, Sina, Sine 등으로 불리다가 네덜란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그 음(音)을 따 ‘支那(시나)’라고 부르면서 널리 퍼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우리식 한자 음(音)대로 ‘지나’라고 불렸다.

그런데 이 ‘支那’라는 표현에는 일인들이 중국을 깔보면서 부르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다. 당시 ‘支那’에 대한 중국측 근거나 흔적을 찾기 위해 주한 자유 중국 대사관이나 화교 학교 등을 찾아 나름대로 조사하고 관계자와 대화도 나누어 보았으나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말하자면 ‘支那’는 중국에 대한 일본식 표기의 성격이 짙은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일본에서조차 ‘支那’라는 한자 표기를 없애고 음(音)만 따서 일본 글자인 가나로 ‘シナ(시나)’라고 쓰는 상황인데 엉뚱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만 몇십 년 동안 무신경하게 ‘지나(支那)’라고 써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용 도서를 위한 편수 자료에서 ‘동 지나해’, ‘남 지나해’를 ‘동 중국해’, ‘남 중국해’로 고치고 교과서와 지리 부도에서도 고쳐 쓰도록 하였다.

이들 해역은 국제적으로 ‘East China sea’, ‘South China sea’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에도 부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해역은 교육용으로뿐만 아니라 시사나 국제 정치, 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인용 빈도가 높은 곳이므로 새로운 명칭을 하루속히 정착시키려면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의 신문사, 방송국에 일제히 협조 공문을 보내 ‘동 지나해’, ‘남 지나해’를 ‘동 중국해’, ‘남 중국해’로 고쳐 불러야 할 당위성을 간략히 설명하고, 새로운 명칭이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당시 MBC 방송의 기상 통보관이던 김동완 씨였다. 그는 이전까지 기상 분야에 전문성 없는 아나운서가 쓰여진 원고를 기계적으로 읽어 나



가기만 해 딱딱하고 단조롭기 그지없던 기상 정보 전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사람들에게 기상 정보가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면서 기상 통보관도 대중적인 스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최초의 인물이었다.

공문을 보낸 지 며칠 지나 김동완 통보관이 공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전화를 해 왔다. 그리하여 나름대로 성의껏,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꽤히 그 취지를 수용하겠노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김동완 통보관의 우리 나라 근해에 대한 기상 개황 해설 때 ‘동 중국해’가 전파를 타고 새로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으며, 다른 신문과 방송에서도 하나둘씩 동참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식민 잔재였던 ‘지나’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지금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다.

### 3. ‘구라파(歐羅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추방

사실 ‘歐羅巴’라는 표현이 일본의 식민 잔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그 표현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여 중국을 통해서도 우리 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歐羅巴’를 중국어로는 ‘오우루오빠’, 일본어로는 ‘요로파’라 발음한다. 말하자면 ‘歐羅巴’는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모두 그들 나름대로 현지음에 충실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다. 그런데 이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 지명을 최대한 현지음에 충실하게 표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럽을 ‘歐羅巴’라 쓰는 이유를 모르고 덩달아 그 한자의 우리식 음(音)대로 ‘구라파’라 적는 것은 전혀 엉뚱한 짓이다. 그리하여 교과서에서 ‘구라파’는 ‘유럽’, ‘동구’는 ‘동 유럽’, ‘서구’는 ‘서 유럽’ 등으로 고쳐 사용하였다. 다만 이를 ‘지나’의 경우처럼 사회 전반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반에서 ‘동구’, ‘서구’ 등으로 마구 쓰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상에서 제 4 차 교육과정 시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일제 식민 교육 잔재 청산 노력에 대해서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돌이켜보았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천학비재(淺學非才)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은 뒷사람들이 채워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는 바이다. 21

〈1982~1989년 지리과 편수관〉

## 『바른 생활』 이야기

지 난 4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부터 원고 청탁서를 한 장 받았다.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1987년)의 편수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편수관의 직무를 중심으로 적어 달라는 것이다. 나는 1981년 9월에 복직을 하고 그 2년 반 뒤인 1983년 3월에 문교부를 떠났기 때문에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다만 그 동안에 초등 학교(당시 국민 학교) 1, 2학년의 통합(도덕, 국어, 사회) 교과서 『바른 생활』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일이 있으므로 그 이야기나 여기 적어 볼까 한다.

그러나 이 글은 모두 나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혹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나의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 읽으시는 분들의 빈축이나 사지 않을지 적어 걱정도 된다. 널리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1977년, 나는 문교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를 떠나 한국능력개발사 주간(主幹)으로 가 있었다. 이 회사의 주장은 부사장급의 높은 자리였다. 회사에서는 나에게 과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운전수 딸린 차도 한 대 내주었다. 나도 열성을 다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나로서는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우선 사용하는 용어 한 마디도 그랬다. 교육과정, 수업 계획, 학습 지도, 교육 평가 등 이런 말만 써 오면 나에게, 원가 계산, 관측 활동, 재고 조사, 어음 할인 같은 말은 여간 생소한 게 아니었다. 나는 어찌다 내 언어를 잃고 이 낯선 언어 속에 와 사는가? 종일 바쁘게 뛰다 밤에 자리에 들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2층 주간실에서 내다 보면 큰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하나 보였다. 오후 다섯시의 국기 하기식(下旗式). 나는 창변에 혼자 서서 애국가에 맞추어 서서히 내려지는 태극기와 그 기를 우려러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하는 어린이들을 멍청히 내려다 보곤 했다. 내가 저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학교 또는 문교부)이 너무 그리웠다.



■ 김 정 권(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그러던 중 1981년 어느 날의 일로 기억된다. 문교부 편수국 김찬재 국장으로부터 좀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그래 무슨 일인가 싶어 가 보았다. 초등 학교 1, 2학년용 통합 교과서 『바른 생활』을 만든다면서 좀 도와 달라고 했다. 그 때 이 책의 편수 담당관은 최현섭, 김용만 두 연구사였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따로 만났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쨌든 나는 두 사람으로부터 이 책을 새로 만들게 된(한 번 만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저간의 사정을 상세히 들었다. 그 사정은 최현섭 교수(현재 경인교육대학교)의 ‘정진권 선생님과 『바른 생활』 교과서-『編修의 뒀안길 제 4 집』’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그 날 밤 나는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때 문교부에서 내게 줄 수 있는 자리는 장관 자문 기구인 국어 심의회 전문 위원뿐이었다.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그 몇달 후 나는 복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게다가 그 동안 회사가 내게 베풀어 준 여러 가지 배려도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나는 결국 신분도 불안하고 월급도 적고 차 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문교부로 돌아갔다. 잃어버린 내 언어가 그림고 다시 교사의 길을 가고 싶어하였다.

초등 학교 1, 2학년의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해서 새로 교과서를 만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교과서를 3등분 해서 도덕, 국어, 사회를 나란히 싣는다는 그런 물리적인 뜻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 교과서의 내용을 흔적 없이 녹여서 한 교과서를 만든다는 뜻인데 그것이 가능할까? 이론상으로는 혹 모르지만 실현 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다. 당시 국어과 담당이었던 최현섭 교수도 교과서 통합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문교부에 다시 갔을 때는, 일은 이미 결정되어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원고도 집필이 끝난 뒤였다. 또, 그 전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교과서 원고를 보니 여러 사람이 집필한 것이어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새로 다듬지 않으면 책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문교부에서 나를 부른 것은, 말하자면 그 원고를 다듬어 통합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나는 참 겁도 없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런데 일을 맡고 보니, 이 세 교과서의 통합 교과서를 위한 기초 연구가 없었다(이 일을 처음 맡아 했던 한국교육개발원에는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구해 보지 못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교과서 통합을 어떻게 이처럼 이렇다 할 기초 연구 없이 할 수 있을까? 나는 적의 의아스러웠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교육과정이었다. 통합 교과서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 먼저 교육과정부터 통합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편성되어 있었다. 물론 교육과정이 교과별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통합 교과서를 못 만들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세 교과에 통달한, 그리고 그 세 교과서의 내용을 좋은 쌀과 좋은 누룩을 섞어 알맞은 온도로 발효

시켜 향기로운 술을 빚어내듯이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노련한 편수관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그런 편수관이 있겠는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작업량이었다. 시간은 1년도 채 못 되는데 만들어야 할 교과서는 4책(1학년용 1, 2학기, 2학년용 1, 2학기)이나 되었다(교사용 지도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맡았다.). 아무리 노련한 편수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참고할 만한 기초 연구도 없고, 내가 세 교과에 통달한 노련한 편수관도 못 되고, 게다가 시간도 없고, 아무리 교사의 길을 다시 가고 싶어 돌아왔다고 해도 일을 하면 할수록 걱정만 쌓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행히 믿는 구석이 한 군데 있었다. 최현섭 편수관과 김용만 편수관, 그들은 온갖 귀찮은 일(가령 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삽화가를 만난다든지 하는 등)을 도맡고, 내가 재집필한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며 그때 그때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이 두 편수관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우선 세 교과의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요소들을 다시 결합해서 하나하나 단원을 짰다. 그러나 매 단위마다 세 교과를 다 통합할 수는 없었다. 국어와 도덕을 통합한다든지 국어와 사회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국어와 사회를 통합한 예이다.

### 꿈 속의 여행

철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숲 속으로 난 작은 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푸른 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왔습니다. 맑은 샘물이 솟았습니다. 철수는 칠푼을 한 잎 따서 샘물을 떠 마셨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다람쥐 두 마리가 바위 틈에서 엿보다가 달아났습니다. 철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 때, 어디선지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습니다. 철수는 그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는 숲 속으로 난 그 작은 길을 잘도 달렸습니다. 철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이 졸졸 노래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자전거가 오토바이로 변하였습니다. 철수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오르막길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새들이 뭐라고 지저귀며 철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마 신기해서 그랬나 봅니다.

마침내 큰 길이 나왔습니다. 십여 명의 어린이들이 땀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 어린이들을 딱하게 생각하였지만, 다 함께 태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오토바이가 버스로 변하였습니다. 철수는 그 어린이들을 모두 태우고 차를 몰았습니다. 앞에 가던 트럭이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 정다운 마을.  
노래하며 손 흔들며 / 우리는 달린다.(후략)

『바른 생활』 2-1

이 단원은 어휘를 늘리고(국어) 교통 수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사회) 설정한 것인데(이 단원에 등장하는 교통 수단은 이 밖에 배와 비행기가 더 있다.) 글 자체는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점심 시간에도 일을 했다. 이것은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교과서의 공급 기일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성취감도 없지 않았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교과서를 심의하는 날이 왔다. 어떤 분들이 심의 위원으로 참석했는지 지금은 희미하지만 한 분은 잊혀지지 않는다. 바로 최태호 선생이다. 선생은 일찍이 문교부에서 편수관과 장학관을 역임하신 아동 문학가(동화 작가)다. 앞에 인용한 ‘꿈 속의 여행’을 심의할 때였다. 선생이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대강 다음과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다.

“꿈 속의 여행이라고 해서 나는 무슨 환상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건 다 교통 수단 이야기 아닌가?”

선생의 눈으로 볼 때 이 글은 아무리 동화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저 한 편의 메마른 설명문일 뿐 동화는 아니었을 것이다. 풍부한 정서, 아름다운 상상,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기대하셨을 선생은 얼마나 낙담을 하셨을까?

마침내 교과서가 공급되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1학년의 경우가 더 그랬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에 들어 있는 낱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결함이 있었겠지만 주로 지적받은 것이 이것이다. 나는 이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역시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제 때에 책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꽤 다행스럽다.

이제 이 글을 마치자니 최현섭, 김용만, 두 편수관의 얼굴 뒤로 또 몇 분의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이화여대의 강우철 교수(『바른 생활』 편찬 위원장)와 서울사대의 이상익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의 한면희 연구원, 초등계의 서성욱 교장과 구연무 교장, 모두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데 헌신한 분들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1983년 3월에 문교부를 떠나 학교(한국체육대학교)로 갔다. 다시 교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 후 2000년 8월 정년으로 물러날 때까지 나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18년, 더러는 피곤도 했지만 늘 행복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편수관실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왜 그럴까? 내 젊음을 불사르던 곳이어서 그럴까? 그러나 돌아보면 이름만 편수관이었지 무엇 하나 반듯하게 해 놓은 것이 없다. 이제 시 한 수 읊기고 이 글을 마쳐야겠다. 오순(吳洵, 고려의 시인)의 ‘강두(江頭)’.

끝없는 봄의 강물 밤안개 속을  
낙시 하나 드리우고  
혼자 앉았네.

잡은 건 몇 마리 민물고기뿐,  
자라 낙을 헛된 꿈에  
십 년이 갔네.

春江無際暝烟沈, 獨把漁竿坐深夜.  
餌下纖鱗知幾箇, 十年空有釣鰲心. 『東文選』

〈1969~1977년, 1981~1983년 국어과 편수관〉



보람된 편수관실의 5년

1. 제 4 차 교육과정과의 인연

내가 문교부 자연과학 편수관실로 발령을 받은 것은 1983년 12월 28일자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던 때였다. 일선 학교에 있을 때도 새 학교에 발령을 받아 새 교무실에 가면 낮이 설어 한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데, 다행히 편수관실에는 아는 편수관이 몇 분 계셔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나는 함갑주 전임 편수관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머리에 스치는 것은 어떻게 한 나라의 중등 학교 수학 교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그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맡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다.

내가 발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제 4 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시기였다. 문교부는 1980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제4차 교육과정 시안을 연구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1981년 3월에 제출된 보고서를 교육부는 수정 보완하여 그 해 말에 문교부 고시 제 424 호로 제 4 차 교육과정을 발표하였고, 1982년 3월 중학교 1 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1983 학년도에 1 학년만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2 학년과 3 학년은 구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었다.

1984년에 들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원고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중학교 2 학년 교과서를 완성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는 1 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새 교과서의 수정 작업이었다. 중학교 수학 교과서의 개발은 문교부의 협조 아래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학교육 담당 부서와 전산실을 합하여 6, 7 명의 연구원이 있었는데 수학 편수관이 새로 왔다고 문교부로 와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금년도에 할 일 중에서 1 학년 교과서의 수



■ 김승걸(전 간판과학과 교장)

정 작업은 내가 맡아서 할 것이니 이것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2학년 교과서 개발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나와 초등 학교 산수과를 맡고 있는 김진락 편수관이 교과서가 개발될 때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가서 같이 작업하기로 하였다.

어느 교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집필자가 여러 명이다 보면 원고 집필에 있어 전개 과정이나 계통성, 표현 방법 등이 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수정하면서 시작한 작업이 시간이 갈수록 정리가 되어지고, 초교, 재교를 거치면서 5교까지 가서 새 학기에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가 인쇄되어 나올 때의 과정은 편수 업무에 처음으로 종사한 나에게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 2. 삽화에 얹힌 이야기

학생들에게 “제일 싫은 과목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학.”이라고 대답한다. 내 생각에도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어렵다고 본다. 평생 수학을 가지고 씨름을 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어린 학생들이야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좀 쉬운 과목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오면 그 과목이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담당 선생님까지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수학이 어려워서 노력을 했는데도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수학이 싫어질 수밖에…….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초적인 개념과 기능의 강조, 문제 해결력의 강조 등인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단골 손님으로 나온다.

첫째, 학습 분량이 많으니 내용 요소를 정선해서 줄여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하향 조절해서 적정화한다.

셋째, 흥미가 있는 소재를 찾아 지도한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를 개발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여하튼, 제 4차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좀 쉬운 내용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년의 학습 내용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교과서를 개발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집합과 명제의 영역을 약화시켜 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학년의 학습 내용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개의 대단원마다 2쪽에 걸쳐 그 단원 설정에 따른 배경 설명과 삽화를 그려 넣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예산에 책정된 삽화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좋은 삽화를 섭외하기가 어려웠으며, 그려 온 삽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몇 번이고 다시 그리게 할 수도 없었다. 그나마 1학년이나 2학년에서 사용 될 삽화는 그리기가 쉬웠으나 3학년에서 나오는 포물선에 대한 삽화는 거의 다시 그려야 했다. 왜냐 하면, 집필자는 원고에 포물선의 개형만 그려 왔고, 삽화가 수학의 특성상 요구되는 정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시늉만 낸 포물선을 그려 왔기 때문에, 이 단원의 삽화는 거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신성균 연구원이 직접 그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률과 통계’ 대단원의 단원 설정이나 배경 등에 대한 집필자의 원고 내용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너무 알기 어려워서 나뿐만 아니라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교과서에 실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에 따른 삽화는 더욱 난감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작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 일단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작업은 진행해 나갔다. 며칠이 지나도 뽀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날짜만 지나가니 애가 타는 사람은 바로 나뿐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입장에서야 최악의 경우 처음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부분은 내가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그에 맞는 삽화를 그리거나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소재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날짜만 지나가니 저녁에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며칠을 이 일로 고생을 하던 어느 날, 드디어 좋은 소재가 생각났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즐겨 놀던 고유 민속놀이인 윷놀이가 불현듯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확률은 두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같이 나올 조건이 같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 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1/2$ 이다. 이와 같이 얻어지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또다른 하나는 윷놀이를 할 경우, 하나의 윷짜이 얹어질 사건과 뒤집어질 사건이 일어날 조건이 같지가 않다. 이런 경우와 같을 때는 많은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확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학교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그에 합당한 윷놀이의 사진을 첨부하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내용은 잘 기술했는데 이에 걸맞는 사진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왜냐 하면, 교과서에 사용할 사진이기 때문에 가능한면 남녀 중학생이 있는 단란한 가족이 명절을 맞이하여 즐겁게 민속놀이를 하는 장면이 좋을 것 같아 그런 사진을 구하려 하니 무척 구하기 어려웠다. 마침 주위에 조건이 맞는 가정이 있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사진을 부탁했더니 일류 사진 작가에게 의뢰해서 찍은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것을 골라 교과서에 사용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 3. 보람된 일을 찾아서

수학 교육 현대화의 정신에 이념을 두고 개정된 제3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많은 결점이 나타났다. 구조주의, 논리주의에 입각한 지나친 학문 중심의 수학 교육에서 벗어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수학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을 강조하게 되었다.

1980년 미국의 전국 수학교사평의회(NCTM)는 ‘1980년대의 학교 수학을 위한 제안’으로 8가지를 내놓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1980년대에는 ‘문제 해결이 학교 교육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을 포함한 세계적인 동향으로 발전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 수학계에서도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을 전후해서 수학 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들 사이에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 발표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연구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던 우리 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중 누구에선가 우리도 그냥 보고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자체 연수를 갖자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모두가 좋은 의견이라 하여 이에 찬성하였다.

당시에 한국교육개발원에는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서울 대학교 우정호 교수가 자문 위원으로 일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문제점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 교수에게 우리의 뜻을 말하고 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청하니 우 교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 형식의 연수를 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주 우 교수가 오던 날, 그는 앞서 말한 미국의 NCTM에서 수학 교육을 위한 제안으로 내놓은 「An Agend For Action」이라는 소책자와 미국 스텐포드 대학의 G. Polya 교수가 쓴 「How To Solve It」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에 관련된 몇 가지 영문판 연구물을 가지고 왔다. 이를 우리는 복사를 하여 그 다음 주부터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연구를 하였는데, 나에게는 이 일이 매우 유익하고 보람되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 4. 대입 학력 고사 수학 범위 반복 사건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 진학, 곧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문교부도 해마다 대입 학력 고사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해당 전년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 1986년에 실시될 1987학년도 대학교 입학 학력 고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5년이 되어 다음 해에 실시할 학력 고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11월 3일에 발표한 수학 I의 범위를 3일 후인 11월 6일에 수정 발표한 사연을 대충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이 공통 수학, 수학 I(인문 계열), 수학 II(자연 계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I, 수학 II-1(인문 계열), 수학 II-2(자연 계열)로 과목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과목 명칭이 바뀌었지만 교육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입 학력 고사에서는 인문계 및 예·체능계 학생이나 자연계 학생들이 고등 학교에서 배우는 전 교육과정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그런데 11월 3일에 발표한 학력 고사 과목 범위 중 인문계(예·체능계 포함) 지원자들이 볼 수학의 출제 범위를 고등 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 I로 국한한 것이다.

고등 학교에서는 대부분 수학 I은 1학년 학생이 공통으로, 문과와 이과로 나뉘는 2학년에

서는 문과는 II-1을, 이과는 II-2를 배우고 3학년에서는 수학 전 과정을 총정리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을 학력 고사 담당 부서인 대학 학무과에서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사실 이 발표가 있기 한 달여 전에 입시 담당자가 편수관실의 나에게 학력 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온 적이 있는데, 그 담당자는 수험생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여론에 교육 개혁 심의회의 안에 따라 발표될 내용을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것 같았다. 그 때, 나는 만약에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인문 과학이나 사회 과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며, 일선 학교의 반발이 상상 외로 클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 후, 내가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처리 여부를 물으니 역시 처음의 안대로 발표할 것이라 하여, 다시 한 번 부당성을 설명하고 수학 II-1에서 배우는 극한, 미분, 적분과 같은 내용은 고등 학교 수학에서 ‘꽃’이라고 강조하며 재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월 3일 발표가 있자 일선 학교와 수험생들의 문의와 반발이 의외로 클 뿐만 아니라 언론 기관에서도 그 부당성이 계속 제기되자 문교부 고위층에서도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차관실에서 회의가 있는데 문제가 제기된 국어과와 수학과 편수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와서 가 보니 실·국장을 비롯하여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김찬재 차관께서 문제가 된 국어 I 과 수학 II에 대하여 담당 편수관의 의견을 묻기에 나는 앞서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담당 사무관도 편수관이 그 부분을 고등 학교 수학의 ‘꽃’이라고 강조했었다며 거들어 주었다. 사실 김 차관님도 그렇게 발표된 경위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 발표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사흘 뒤, 각 신문에는 커다란 활자로 “문교부, 발표 사흘만에 번복”이라고 대서 특필되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요란하게 방송되었다. 여하튼 문교부는 처음 잘못 발표된 이유를 신·구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내용상 혼동한 데서 실수를 범했다고 하고, 현재 고등 학교 2학년이 내년에 보는 대입 학력 고사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수학 범위에 수학 II-1도 포함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교육과정을 관장하는 문교부가 신·구 교육과정을 혼동해서 잘못 발표되었다는 이유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일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983~1988년 수학과 편수관〉

## 제 4 차 검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 김 / 허 강(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 1. 제 4 차 검정 제도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년 12월 31일 개정·고시되었다. 이 때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이 동시에 개정·고시되었다. 그래서 문교부는 제 4 차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 교과서 편찬에 들어가 1 종(국정) 교과서는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유치원(64 책), 국민 학교(143 책), 중학교(65 책), 고등 학교(440 책), 특수 학교(55 책) 등 총 767 책(지도서 포함)을 개발하였다.

2 종(검정) 교과서는 검정 실시 공고를 1982년 4월 1일에 냈는데 중학교 6 과목, 고등 학교 23 과목이었다. 이 때의 검정 실시는 1977년 김인정 교과서 사건 후에 검정 공고한 시기(1977. 7.)를 기준으로 할 때 5년 만의 일이었다.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 12. ~1987. 3.)에는 검정 업무는 한 번만 실시하였다. 즉,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전과목이 국정이었는데 예·체능계 6 개 과목(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사회과 부도)이 검정으로 풀렸으며, 인문계 고등 학교는 국어「문법」이 국정으로 환원된 대신에「현대 문학」이 검정으로 되고, 사회과 2 과목(지리, 세계사), 실업과 1 과목(산업 기술)이 검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중·고교를 포함해 모두 9 개 과목이 검정으로 풀렸으나 주요 과목은 그대로 묶여 있었고, 실업계 교과서는 종래대로 모두 국정으로 남았다.

즉, 문교부는 중·고등 학교 교과서 중 1 종 교과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 종 교과서의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에서 다종 다양한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으며, 이 정책의 변화는 정부가 제시한 자율화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 조(1 종 도서의 대상)를 개정하여 2 종 도서의 범위를 넓혔다. 이것은 교과서 출판사, 제작자의 창의력을 진작하고 질 높은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은 그 목적을 현행 교과용도서를 새 시대의 교육 이념 구현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



하도록 편찬하는 데에 두었으며, 그 방침으로는, 첫째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체계적 반영), 둘째 자율 학습의 강화를 위한 편찬 체제의 개선, 셋째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에 두었다.

제 4 차 교육 과정기의 검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집필 및 검정 기간의 촉박, 둘째 검정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셋째 합격·불합격의 일회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검정 제도가 심사 기능 위주로만 운영되어 검정 출원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권고·촉구할 수가 없었으며, 불합격본의 저작자들은 이의(異議) 신청조차 못 하도록 경직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현행 교과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고, 한정된 쪽수에 압축된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고, 설명이 불충분하므로 학습 참고서가 범람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 2. 검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다음은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당시의 상황을 적어 보려고 한다. 여기에 제기된 이야기는 다른 화제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관심도가 높았던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문교부 검정 업무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은 검정 업무의 중요도가 크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교과서 출판사의 입장에서 합격, 불합격이란 운명을 좌우하는 화제라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 가. 집필상의 유의점

집필상의 유의점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공고 때(1977. 8. 1.)의 것과 제 4 차 교육과정기 때(1982. 4.)의 것을 비교하면 크게 다른 게 없다. 다음 표는 주제별로 비교한 것이다.

〈집필상의 유의점 주제별 비교표〉

제 4 차 교육과정(1982. 4.)	제 3 차 교육과정(1977. 8.)
1. 편찬 목적 2. 편찬 방침 3. 편찬 기저 4. 일반적 집필 지침(23 항목) 5. 교과별 집필 지침 6. 체제에 관한 유의점	편찬의 기저 1. 교과서의 집필상의 유의점 · 일반적 유의점(27 항목) · 과목별 유의점 2. 지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 · 일반적 유의점(40 항목) · 과목별 유의점 3. 체제상의 유의점

앞의 표에서 제 3 차 때는 편찬의 기저를 ‘편찬의 전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기본 지침’으로 3 개의 하위 제목이 있는 반면, 제 4 차 때는 ‘편찬 목적’과 ‘편찬 방침’을 내세웠는데, 내용상으로는 차이점이 별로 없었다. 다만, 용어 사용에 있어 제 3 차 때는 ‘유의점’이었는데, 제 4 차 때는 ‘지침’이란 단어를 써 강제성을 내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문교부에서는 제 4 차 때 1 종 교과서의 대상을 줄이고 검정 및 인정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의 근거는 교과 내용 조직의 획일성을 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검정 결과,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 국정과 대동소이한 것이라면 굳이 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2 종 교과서의 ‘집필상의 유의점’과 관련된다. 즉, 1982년도에 공고된 2 종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은 일반적 집필 지침과 교과별 집필 지침으로 구분하여 자세한 내용까지 안내하고 있다. 이 점은 교재 집필의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살렸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집필자의 창의적인 내용 선정과 조직 원칙이 줄어들어 대동소이한 내용의 책들이 나온다면, 1 종 도서를 개발하던 때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검정에 합격된 2 종 도서는 같은 교과 내용을 다루더라도 5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차이 있는 다른 독특한 측면이 부각되는 다양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 ‘집필상의 유의점’을 상세화할 것이냐, 아니면 상세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5 종류의 도서가 같은 성격의 교과서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다양성 있는 교과서로 편찬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교 당국자는 이에 신중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문교 당국에서는 제 5 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을 고시하여 집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법령상으로 교과서에 관한 체제 기준이 없는 데도 ‘집필상의 유의점’에 대한 규제 항목을 완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 내용 행정의 경직성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기만 하다.

## 나. 검정 심사 기준

‘집필상의 유의점’ 중의 일반적 집필 지침(제 4 차)이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입증된 사실이다. 즉, 제 4 차 때의 2 종 교과서 심사 기준표를 보면, 필수 기준은 ① 교육 목적과의 일치(심사 관점 2), ② 국시·국책과의 일치(심사 관점 5) 등의 심사 항목을 설정해 놓았으며 ‘있음’, ‘없음’으로 나누었는데, 가령 해당 사항(①, ②)에 ‘있음’이 있으면 불합격되었다.

필수 기준 외에 공통 기준은 I. 내용의 적합성(심사 관점 4), II. 내용의 정확성(심사 관점 3), III. 내용의 연계성(심사 관점 1), IV. 내용의 참신성(심사 관점 2), V. 내용의 공정성(심사 관점 1), VI. 체제(심사 관점 2) 등 6 개 항목으로 나누고, 심사 관점은 13 개로 나누어 각기 5, 10 점으로 배점하여 합계 100 점이 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교과 기준인데 심사 항목은 3 개(한문의 경우는 한자, 한문, 단원의 구성)이고

**제3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해서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국·검정 교과서의 차별화되는 점으로 ‘자율 학습의 강화’와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과정’을 들 수 있다. ‘자율 학습의 강화’는 먼저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의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자율 학습의  
중요성과 이의 실현을 교과서에서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심사 관점은 16개로 각기 5, 10 점으로 합계 100 점이었다. 즉, 필수 기준은 ‘있음’, ‘없음’으로 판정하고 공통 기준 100 점, 교과 기준 100 점, 합계 200 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이 기준표(사열표)는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 비공개 원칙이었으며,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때부터는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위해 공개되었다.

그런데 왜 검정 심사 기준을 제 6차 교육과정기에 와서 공표하였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즉, 검정 심사 기준은 제 2차 교육과정기인 1970년 11월 25일 문교부령 제 270 호로 제정된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행 세칙’ 별책으로 ‘실업 고등 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이 공개된 바 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는 제 4차 때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그 유형의 기준이 세상에 알려진 뒤였다.

또한, 검정 심사 기준은 ‘집필상의 유의점’의 각 집필 항목이 심사 기준화된 것이므로, 비공개로 하거나 비밀에 붙일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이 점으로 보아 문교부는 제 4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교과서 업무를 너무 비공개 위주로 관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의 많은 검정 교과서 출판사 대표나 편집 간부, 그리고 저작자들이 심사 기준(사열표)을 사전에 알리고 백방으로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 다. 자율 학습 강화와 교과서 단원 전개 과정

제 3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해서 제 4차 교육과정기의 국·검정 교과서의 차별화되는 점으로 ‘자율 학습의 강화’와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과정’을 들 수 있다. ‘자율 학습의 강화’는 먼저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의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자율 학습의 중요성과 이의 실현을 교과서에서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일반 지침에서는 ‘내용의 수준과 진술’에서 ‘내용의 양’ 그리고 ‘연구·연습 문제의 수록’ 등에서 자율 학습이 강화되도록 집필을 유도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자율 학습을 위한 교과서 편찬은 ‘집필상의 유의점’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쪽수의 제한으로, 또한 집필 기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소론은 여러 사람이 밝혔으며, 부당함도 그 이론과 실재를 들어 제시한 바 있다.

교과서의 단원 전개는 ① 학습 과제 안내, ② 학습 내용·관련 정보·방법, ③ 정리·적용, ④ 확인·보충 등으로 교과서의 성격을 살려 창의적으로 꾸미도록 하였다. 본래는 교과서에서 단원 전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교수·학습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광복 후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교과서의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교과서는 교과 내용에 따라 그 배열과 조직을 달리하였거나 본문의 내용에 따라 연습 문제를 추가하는 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다든가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든가 그 분량이 많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교과서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지적이 되지 않았다.

사실 교과서의 핵심은 교육 내용의 조직과 관련되는 단원의 전개 과정에 있으며, 단원 전개 과정이 어떤 유형(model)에 근거하여 교과 내용이 조직되는가가 교과서의 생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제 4차 교육과정기 이전까지 약 40년간은 일본의 교과서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의 판면 구성 형태에서 단원 전개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체제가 일본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는 교사의 수업 형태와 학생의 자율 학습 등을 고려하여 단원의 전개 과정 유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검정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새 유형을 이해하고, 이 체제를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검정 교과서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저작자, 편집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유형 개발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새 유형의 개발은 검정 교과서 내용 조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므로, 이 유형의 개념 파악을 문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문교부는 사무적으로 설명을 했을 뿐, 교과서 구조 개선을 선도한다는 진지한 자세는 아니었던 것이다. <sup>24</sup>

〈1969~1977년 수산·해운 편수관〉

# 교과서의 표현과 표기

글 / 정희창(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 1. 교과서 검정의 시작

평소에 막연하게 품었던 ‘교과서는 완벽에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는 검정 첫날에 교과서를 읽는 순간 깨지고 말았다. 첫 번째로 읽었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교과서에 담길 만한 좋은 문장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서 문맥을 통해 뜻을 짐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교과서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심사를 진행하면서 교과서의 표현·표기를 별도로 심사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 때까지는 각 교과과목의 전공자가 내용을 심사하면서 표현도 함께 다루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검정 교과서는 어느 정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태어난 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 2. 교과서의 표기 문제

교과서를 읽다가 아래와 같은 부분을 만나

게 되었다고 해 보자.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 (1) ㄱ. 지나친 억측은 삼가해야 한다.
- ㄴ.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를 압박하였다. 뿐만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견제하였다.
- ㄷ.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 ㄹ. 반지름 r을 구하시오.
- ㅁ. 모짜르트는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1)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고쳐야 할 대상이다. 교과서의 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에서 제정한 어문 규범과<sup>2)</sup>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국어 사전<sup>3)</sup>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표기를 검정할 때에는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어 사전을 찾아보려는 마음 자세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검정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문 규범’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어문 규범은 원칙과 약간의 예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주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국어 사전과 교과서의 편수 자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편수 자료 또한 너무 낡거나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sup>4)</sup> 그런 까닭에 교과서의 표현·표기 검정은 주로 필자를 비롯하여 어문 규범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쪽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검정위원의 검정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sup>5)</sup>

(1ㄱ)의 ‘삼가해야’는 ‘삼가야’가 옳다. 원래 ‘삼가다’이므로 ‘삼가하다’로 쓸 이유가 없다. 명사형도 ‘삼가함’이 아니라 ‘삼감’이다. “신이 삼가 아뢰옵나이다.”의 경우 “신이 \*삼가해 아뢰옵나이다.”로 쓰는 일이 없으므로 구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잘못이 적지 않았다.

#### (1) ㄱ’ 로서 / 로써, 있음 / 있음

(1ㄱ’)의 ‘로서 / 로써’, ‘있음 / 있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쓰는 일은 그렇게 수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 국어 사전을 찾는 것만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서’는 ‘자격’을 뜻하고 ‘로써’는 ‘수단, 방법’을 뜻한다. ‘로써’의 ‘써’가 ‘쓰-[用]’에서 온 말이므로 ‘~로 써서, ~를 써서’로 풀 수 있으면 ‘로써’이다. 가령, “사람들은 돌로서 / 로써 석기를 제작했다.”는 ‘사람들은 돌을 써서 석기를 제작했다’로 풀 수 있으므

로 ‘돌로써’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있슴 / 있음’과 같은 기초적인 잘못도 교과서에 많이 나온다. ‘있습니다’에서 ‘있슴’으로 이어지는 잘못은 ‘먹습니다’와 ‘먹음’으로 예를 바꾸어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ㄴ)의 ‘뿐만아니라’는 흔히 접속어처럼 쓰지만 접속어가 아니다. 위의 ‘뿐만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뿐’과 ‘만’이 비자립적인 조사이므로 단독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는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도 많다. ‘뿐’과 ‘만’은 조사이므로 ‘그뿐만 아니라’로 앞말에 붙여 쓴다.

#### (1) ㄴ’ 그리고는, 그리고 나서

‘그리고는’과 ‘그리고 나서’ 또한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말로 틀리는 일이 많다. ‘그리고’는 접속어이므로 ‘그리고는’과 ‘그리고 나서’와 같은 구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는’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접속어 ‘그런데, 그러나’ 다음에 ‘는’이 결합한 ‘그런데는, 그러나는’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의 ‘-고 나서’ 앞에는 ‘먹고 나서, 뛰고 나서, 말하고 나서’에서 보듯이 앞에 동사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의 ‘그리-’는 동사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사 ‘그리-[畫]’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이, 그, 저’가 짝을 이루어 ‘이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러고 나서’처럼 쓰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를 잘못 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1ㄷ)은 쉽표를 잘못 쓴 경우다. 이른 접속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다음에는 쉽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쉽표는 단순히 한 번 쉬어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1) ㄷ' 성질 급한 철수의 동생이 화를 내었다.

ㄷ" 성질 급한, 철수의 동생이 화를 내었다.

즉 (1ㄷ')에서 '성질 급한'은 '철수'를 꾸미지만 (1ㄷ")에서는 '성질 급한'이 '철수의 동생'을 꾸민다. 즉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뜻으로 쉼표를 쓰는 것이다.<sup>6)</sup>

(1ㄷ)에서 'r'를 '아르'라고 읽는다고 하면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1ㄱ)의 '모짜르트' 또한 '모차르트'가 맞는 말이다. 외래어 표기의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7)</sup>

많은 사람들이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관된 검정을 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표현·표기 팀에서 30여 명의 검정 위원들이 검정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삼았던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를 검정할 때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규범은 다를 가능성이 많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거나 현재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규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어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돈을 바래서 널 도운 게 아니야.”에서 “\*바래서”는 “바라서”를 잘못 쓴 것이라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바라다’에서 온 말이므로 “\*바래서(←바라-+-아서)”가 될 수가 없다.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또한 “네가 잘 되기를 바라.”가 옳음을 알 수 있다.<sup>8)</sup>

둘째, 쉽게 예측해서는 안 된다. 가령, ‘물속, 마음속, 머릿속, 땅속’이 한 단어임을 알고 있더라도 ‘숲 속’을 쉽게 ‘숲속’으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 ‘알아보다’, ‘찾아보다’, ‘살펴보다’는 한 단어이지만 ‘씨보다’는 한 단어가 아니다. 특히 띄어쓰기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ㄱ. 맞히다/맞추다, 알아맞히다/알아맞추다

ㄷ. 부서지다, 부서뜨리다/부숴지다, 부숴뜨리다

‘맞히다’와 ‘맞추다’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퀴즈의 정답을 맞추다.”는 ‘맞히다’를 잘못 쓴 것이다. 구분하지 않고 “한국 양궁 금메달을 맞추다.”라고 하면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주문했다는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린다. ‘적중하다’는 ‘맞히다’이고 ‘견주어 보다’는 ‘맞추다’이다. 퀴즈의 정답은 ‘맞히는’ 것이다. ‘맞추다’는 “각자의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어 볼 것.”과 같은 경우에 쓰인다. ‘알아맞추다’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알아맞히다’만이 가능하다.

‘부서지다/부숴지다’는 ‘부수다’에 ‘-어지다’가 붙은 말로 생각해서 ‘부숴지다’로 오해하는 일이 많다. ‘부서뜨리다’ 또한 마찬가지다. ‘부서지다’, ‘부서뜨리다’는 예외적이다.<sup>9)</sup>

이러한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 사전을 꼭 찾아보아야 한다. ‘머리말’, ‘인사말’과 ‘존댓말’, ‘혼잣말’을 직관으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는 오로지 사전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사전을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 국어 사전을 찾기 싫어하는 것은 좋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넷째, 검정 위원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한 과목에 출원한 교과서가 많게는 10 권 이상인 경우도 있다. 어느 한 책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다른 책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면 서로의 노력은 그만큼 줄일 수 있다.

- (3) ㄱ. 등곶길, 최댓값, 최솟값,  
 ㄴ. 머리말, 인사말, 초점(焦點), 개수(個數)  
 ㄷ. 시곗바늘

사이시옷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미빛/장밋빛’을 예로 들면 [장미뽀/장민뽀]으로 발음하면서도 ‘장미빛’으로 적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잘못이다. 표준 발음이 [장미뽀/장민뽀]인 이상 ‘장밋빛’으로 적어야 한다. [넌까/내가]라고 발음하는 말을 ‘내가’가 아닌 ‘넋가’로 적어야 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이러한 면에서 (3ㄱ)의 예들을 ‘등교길, 최대값, 최소값’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sup>10)</sup> (3ㄴ)의 ‘머리말, 인사말’은 [머리말], [인사말]로 발음하므로 ‘머리말, 인사말’로 적는 것이고, ‘초점(焦點)’, ‘개수(個數)’는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3ㄷ)은 ‘시계’와 ‘바늘’의 결합이 합성어이면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만 구라면 들

어가지 않음을 보여 준다. 구와 합성어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역시 국어 사전을 찾아보아야 한다. ‘시곗바늘’은 합성어이다.

띄어쓰기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물에서 띄어쓰기를 일관되게 한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그런 까닭에 검정 도서 또한 띄어쓰기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아예 관심이 없는 책들도 부지기수다.

- (4) ㄱ. 하기에 망정이지 / \*하기에망정이지  
 ㄴ. 왜냐하면 / \*왜냐 하면  
 ㄷ. 태산만 하다 / \*태산만하다, 믿을 만하다 / 믿을만하다  
 ㄹ. 찾아보다 / 알아보다 / 살펴보다 / 찾아내다 / 알아내다  
 ㅁ. 색 다른 / 별 다른 / 또 다른 / 또 다시 / 좀 더  
 ㅂ. 아이스크림, 홈런, 골인, 드라이아이스, 홈페이지, 키보드

(4ㄱ)의 ‘하기에망정이지’를 어미로 다룬 일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 ‘하니망정이지’, ‘해서망정이지’, ‘하니까망정이지’ 등등을 모두 어미라고 해야 하고 ‘하기(에) 마련이다’와 ‘하니 다행이다’, ‘하기(에) 다행이다’의 구조와는 다르다고 해야 한다. 문법상으로 그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하기에 망정이지’가 옳다. ‘왜냐 하면’의 띄어 쓰자는 주장은 결국 ‘왜냐 하면’의 구조라는 것인데 ‘왜냐 하니’, ‘왜냐 해서’, ‘왜냐 하고’, ‘왜냐 하면서’와 ‘왜냐하면’은 동일하지 않다. 게다가 ‘왜냐면’과 같은 준말이 가능하므로 ‘\*왜냐니(←왜냐 하니)’와는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다. 그런 까

답에 ‘왜냐하면’은 한 단어로 보아야 한다. ‘태산만 하다’를 ‘태산만하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지만 ‘태산만 못 하다’를 볼 때 ‘만하다’는 접미사가 될 수가 없다. (4ㄷ)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므로 띄어쓰기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4ㄱ)은 교과서에서 붙여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4ㄴ)은 외래어 중에서도 붙여 써야 하는 예들이다.<sup>11)</sup>

### 3. 교과서의 표현 문제

교과서의 표현은 표기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표기의 문제는 비교적 명백한 답이 있고 국어 사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표현 문제는 문제 자체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답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의 표현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검정 과정에서 모든 표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과서 제작자를 위한 문장 훈련 과정을 설치하거나 교재를 개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표현의 문제 몇 가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5) ㄱ. 문화적인 교류의 폭과 속도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 ㄴ. 농경이 발달하면서 사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식량의 큰 몫을 차지하였다.
- ㄷ. 이 글을 읽고 난 느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는가?
- ㄹ. 자신을 올바르게 알려면 자신에 대한

후회나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ㄱ. 국어에서는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기도 하고 ‘진지, 연세’처럼 특별히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다.
- 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 ㄷ. 호족 세력의 성장은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시켰다.
- ㅇ. 수준 높은 국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문법에 관한 지식도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

(5ㄱ)에서 ‘폭이 증대되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5ㄴ)에서 ‘사냥’은 ‘식량’에 속하지 않는다. (5ㄷ)은 밑줄 친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글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정도로 고치는 것이 옳다. (5ㄹ)의 ‘~알려면 ~부족하다’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후회나 반성만으로는 자신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5ㄱ)은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단어도 있다’를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로 고쳐야 한다. (5ㄴ)은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밑줄 친 부분을 ‘주몽이 건국하였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5ㄷ)에서 ‘수탈이 강화되다’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다’로 고쳐야 한다. (5ㅇ)에서 ‘알아야 한다’의 주어는 사람이므로 ‘국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을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으로 고쳐야 한다. 22

- 1) ‘어느 정도 특별한 대우’라고 한 것은 이러한 특별 대우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정이 절반 정도 지나면서 표현·표기 팀이 해체되었는데 이 때부터 직접 교과서를 읽지 않고 필자를 포함한 자문 위원 한둘이 교과 검정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검정이 진행되었다. 예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 때의 문제는 표현·표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표현·표기 검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표현·표기를 검정에 도입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표현·표기의 검정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 ‘어문 규범’은 ‘어문 규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에 들어 있고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들어 있다.
- 3) 국어 사전끼리 서로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국어 사전 중에서 검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어문 규정을 직접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 국어 대사전”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어문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구체적인 표준어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2000년 이후에 새롭게 출간된 국어 사전은 모두 “표준 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어문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 4) 실제로 교과서의 표현·표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한글 전용 편람’은 1969년에 발행한 것으로 1988년의 한글 맞춤법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 5) 1차 검정 위원이 책 이름, 책 번호, 쪽수, 행과 줄의 내용을 적으면 2차 검정 위원은 관련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어떤 책의 경우에는 잘못된 내용을 지적한 항목이 몇백 군데가 되기도 했다. 표현·표기 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를 모두 교열해 주는 것이 교과서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 6) 특히 교과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쉽표를 쓰는 일이 많지만 모두 쉽표를 쓸 이유가 없는 경우다.  
(예) ㄱ. 자동차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ㄴ. 추에 실을 매달고, 실을 아래로 당겨 보자.
- 7) 참고로 외래어 표기와 관련하여 혼동하기 쉬운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이 붙은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다.)  
(예) ㄱ. 포일/\*호일, 타깃/\*타겟, 텔레비전/\*텔레비전  
ㄴ. 비커/\*비이커, 스포이트/\*스포이드, 윈도우/\*윈도우, 케이크/\*케익  
ㄷ. 드로르자크/\*드보르작, 모차르트/\*모짜르트, 슈트라우스/\*시트라우스, 바흐/\*바하, 고흐/\*고호, 세잔/\*세잔느,  
ㄹ. 뉴턴/\*뉴튼,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 라브아지에/\*라브와지에  
ㅁ. 세빌라/\*세비라의 이발사, \*시트라우스/슈트라우스
- 8) 이럴 경우 현실과 규범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표현을 바꾸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9) 역사적으로 ‘봇다’와 관련이 있다.
- 10) 어문 규범을 지킨 요즘 국어 사전에 사이시옷 표기가 너무 많아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동안 사이시옷 표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비표준어를 쓰면서 왜 이리 표준어가 자주 바뀌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사이시옷 표기가 바뀐 지 십여 년이 넘었는데도 교과서에 이러한 오해가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11)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준한다는 원칙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아이스 크림’이나 ‘휴런’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외래어도 우리말의 일부분이므로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 ‘아이스 크림’으로 띄어 쓰는 것을 보면 교과서의 지침이 예전 것임이 드러난다.

## 교육 현장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국사 교과서

■ 글 / 김미경 (청주 수곡중학교 교사)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과서에 대한 기대감을 늘 갖게 된다. 지난 해 제 7차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국사 교과서가 새로 나올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꾸며져서 나올까? 등 나름대로의 궁금증을 갖고 교과서를 기다렸던 적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정 교과서라는 큰 틀을 벗어난 못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전의 교과서와는 차별화된 뭔가가 내재되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교과서를 처음 대하는 느낌이 조금은 달랐다. 겉표지를 시작으로 한 장 한 장 넘겨 보며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마치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달라진 그 무언가를 찾으려 애를 써보기도 했다.

새로운 국사 교과서는 학습자들이 기존에 느끼던 재미 없고 딱딱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 용어와 방대한 사실의 나열들로 이루어진 교과서라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깨뜨리려 애쓴 흔적이 엿보였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젊은 감각을 고려한 때문인지 우선

겉모습부터가 달라졌다. 책의 크기도 커졌고 종이 질도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컬러를 사용하여 시각적 지루함을 어느 정도 덜어 주었으며, 사진과 삽화, 그림, 지도 등의 자료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게 제시되어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또, 상·하 두 권의 교과서가 한 권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술 체계면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대단원의 시작 부분에서 학습할 내용과 연표, 같은 시대의 세계 지도 등을 한 면에 제시하여 한 국사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단원의 길잡이를 하고 있다. 소단원에서도 연구 과제를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통해 익혀야 할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준다. 이어 본문에서는 서술된 내용 분량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읽을거리와 도움글 및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설명과 함께 많이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마다 내용 요지와 주요 용어, 탐구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한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대단원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탐구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조사, 분석, 종합을 통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단원 수행 과제로 상상화 그리기, 백지도, 신문만들기, 역사 인물 평가하기, 개혁안 작성하기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과거인들이 처한 문제 상황이나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 세계를 감정 이입적으로 이해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였다. 과거 인간들이 부딪혔던 과제를 선택하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해결하는 과정이 주목되는데 이는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적 사건의 추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를 전체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의 달라진 모습을 대략 살펴본 바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교과서가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기에 바람직한 내용으로 짜임새 있게 편집되어 보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교과서가 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새로운 교과서가 발행되어 교육 현장에서 쓰여져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불만족의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런 불만족을 새로운 교과서에 반영하여 만족을 얻어보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 왔다. 과연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바람직한 국사 교과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까? 변화의 속도가 더딘 국사 교과서를 바라보며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는 탐구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강조점을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두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교과서를 본다면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찾고 탐구를 위해 활용하고 그들이 알아 낸 지식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를 안내하는 학습 지침서이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의미를 서로 나누어 보게 하는 지식의 구성 과정을 안내하는 주요한 교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사료 학습, 탐구 학습, 과제 해결형 학습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교과서 자체가 곧 학습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는 사고력을 길러 주는 교재여야 한다. 그 동안 연대와 사실 암기에 치우치는 등의 입시 위주의 역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지 과거의 지식을 외우고 익히는 과목으로서의 국사가 아닌,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고 이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국사 교과가 강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로 제시되는 역사 서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교재로 제시되는 역사 서술은 올바른 과거를 비추고 전달하는 거울과 같은 도구로 인식되어 왔고, 교재로서 적합한 역사 서술은 객관적이며 왜곡 없는 사실을 담고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서술 내용면에서 최근 학계의 새로운 연구 동향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과정에 의해 체제나 내용, 분량까지도 엄격하게 통제받는 상황에서 내용 준거안에 따라 실릴 내용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본문의 서술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



있던 것이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는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국사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란 역사가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학생 스스로가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사건 혹은 한 시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나 역사 속의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여러 학설을 살펴보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본다. 역사 교육의 목표는 역사적 지식의 암기보다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는 읽기 쉬운 책이어야 한다. 그 동안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이해를 돕는 국사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안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 교과서는 지나치게 지루하고 경직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과서 서술 방안이 모색된 것이다.

교과서는 재미있어서 읽거나 적어도 읽다 보면 재미를 느껴야 한다. 그러면서도 교과서는 그 속에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역사 교육의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을까?”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면, 많은 학생들이 서슴없이 “만화책처럼.”이라는 대답을 한다. 교과서가 너무 사건 나열식의 딱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외워야 할 내용이 많고, 특히 역사 용어에 대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재미있는 이야기 식으로의 교과 서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과서를 통해 읽는 재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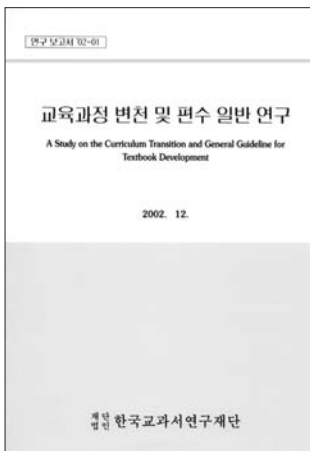
느끼고 싶은 것이다.

학습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교과서를 읽을 때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교과서를 읽다 보면 모르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생들이 교과서만 읽어도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국사 교과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편찬되어야 한다. 편집 등 외양만 화려하기보다 내용이 충실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장의 교사들은 교과서 전반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절실함을 느끼며, 교과서는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기술되기보다 교과서를 읽고 생각하고 학습한 내용을 드러내 보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과서의 내용 구조와 서술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체제에서는 실업계와 인문계의 학업 수준에 상관 없이 학생들은 통일된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그렇기에 실업계 학생들에게서의 국사 교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또 한편으로 향토사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지역화된 교과서가 마련되지 않고 다만 교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향토사 학습을 전개할 뿐이다. 이에 국사 교과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학교급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과서가 사용되고, 지역의 역사적 변천을 담은 지역화된 교과서가 사용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배가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㉔

#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연구



## 〈연구 보고서 2002-1〉

1990년 문교부가 발간한 「편수 자료 I - 교육 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은 제6차와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을 안내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에 발행된 편수 자료가 2000년대의 교과용 도서 편찬을 지원하는 데에는 시의성의 문제가 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편찬 업무를 뒷받침하거나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적절성이 낮은 부분이 없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편수 자료의 성격과 기능은 무엇인가? 둘째, 현행 편수 일반 자료를 관련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새 편수 일반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왜 실어야 하는가? 등 이와 같이 편수 자료 개편과 관련하여 구성 내용 체제를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며, 아울러 그러

한 주장의 타당한 근거를 확립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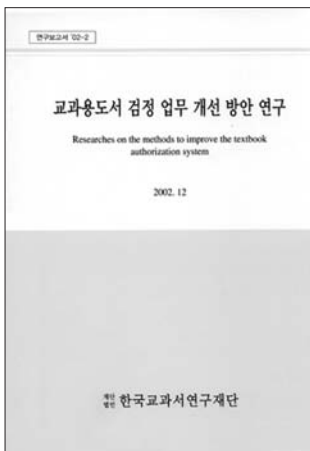
편수 일반을 제시하는 자료의 구성안을 제안하는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 즉 현행 편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새 자료의 구성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주된 연구 내용은 이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내용의 범위를 정할 때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내용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제시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한정시켜야 할 것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편수 자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크게 연구편과 내용 구성안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연구편은 편수 자료의 성격과 현행 편수 자료에 대한 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한다. 제2부 내용 구성안편은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에 포함시킬 내용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편수 자료의 다양한 전형 중에서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이것만이 편수 자료를 대표하는 절대안은 아니다.

이 연구 자료는 편수 자료 발간 정책의 기초를 수립하는 데 이론적 배경 및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할 편수 일반 자료의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편수 자료 심의 위원회가 논의하여 확정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 관련 지침(편찬 지침, 심의 기준 등)과 편수 자료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국가 교육과정 시행 방향을 명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정호 님(연구 책임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춘식, 김광민 님, 교육인적자원부 박삼서, 박제윤 님, 한국교원대학교 최병모 님, 인하대학교 홍후조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2-2〉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가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 오던 검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어 검정을 통과한 첫 번째 사례로서 검정 업무 이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정 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보완된 검정 제도의 시행으로 더욱 질이 높고 다양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검정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출판사 및 저자들이 교과용 도서의 개발 편찬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과정에서 문제점의 원인, 실태 검토와 개선 방안, 둘째, 검정 제도가 교과용 도서 개발·발행사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및 그 밖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합리적 방안 제시, 셋째, 검정 제도가 교과용 도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넷째,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검정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탐색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정 업무의 개선점으로서 ▷ 현행 교과용 도서 검정 수수료가 검정 주체의 일방적인 징수 형식을 띠고 있어 부담 주체가 되는 출판사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제도 및 금액에 대한 개선, ▷ 연차별 검정 방식은 학년별 검정 합격 및 탈락으로 교과서 사용의 일관성·계열성을 해쳤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겹치기 개발로 저작자·편집자의 피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검정 시간 및 검정 내용의 질 문제, 검정 위원 확보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 ▷ 현행 교사용 지도서를 인터넷과 같은 매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과 보완 교재 개발 방안 및 개발 기간 확대로의 개선, ▷ 교과별 전문 출판사 육성으로 교과서 발행사의 수익성에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과서 개선을 위한 모니터제 구축에 의한 수정 보완 방안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차후 교과서 검정 제도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현재보다는 질 높은 교과용 도서가 편찬,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님(연구 책임자),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강환동 님, 인하대학교 홍후조 님, 금성출판사 조성준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 〈연구 보고서 2002-3〉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는 부분별로 단편적인 연구 자료가 있을 뿐 사실(史實)에 바탕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교과서의 중핵을 이루는 검인정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저작·검인정·발행·공급 등의 개발사 자료를 집성하여 분석하고 이들을 체계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광복 후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교육과정기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대해 교육과정과 검인정 교과서 개편, 검인정 공고와 집필 지침, 검정 기준과 합격 등 검인정 업무 체계를 중심으로 밝히고, 둘째 광복 후 교과서 검인정 제도와 함께 해 온 교과용 도서 법규, 행정 기구, 저작권, 교과서 체제, 교과서 연구, 부교재 등이 교육과정기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밝히며, 셋째 교과서 검인정 제도의 쟁점과 발전 방향 등을 각 분야별에서 제시하고, 넷째 교과서 검인정 제도와 관련된 중요 자료들을 수집하여 부록에 수록하는 데 있다.

이 연구 보고서의 구성은 제1부 서론, 제2부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 개관, 제3부 교과서 검인정 제도의 변천, 제4부 요약 및 제언 등으로 짜여져 있다. 제1부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의 시기 구분, 선행 연구 개관, 연구의 제한점과 기대 효과 및 연구 보고서의 구조 등을, 제2부는 현행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를 개요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주로 교과서 편찬 제도와 교과서의 발행·공급 등을 다루었다. 제3부는 ‘교과서의 검인정 업무’ 부분과 앞에 제시한 주요 사항별로 나누어 짜여졌다. ‘교과서의 검인정 업무’에서는 교육과정기별로 검인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리하였고, 결론으로 교육과정기별로 제도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정 도서의 변천’을 추가하였다. 제4부에서는 요약과 제언을 게재하였다. 끝으로 「부록」은 집대성의 개념과 검인정 교과서의 주요 관련 자료의 엄선 차원에서 유용한 자료들을 제한해서 게재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 효과는 광복 후 검인정 교과서 변천의 사실(史實)을 서술하고 극명하게 분석·정리하는 최초의 연구서를 마련, 검인정 교과서의 역사와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검인정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서가 기반이 되어 앞으로의 검인정 교과서 연구는 더욱 심화·보완되는 계기가 되고, 또 주제별로, 하위 내용별로 전문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검인정 교과서의 역사는 검인정 교과서 관련 단체의 역사이기도 하므로 앞으로 관련 단체의 연사(年史)를 편찬하는 경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허강 님(연구 책임자), 전 문교부 수석 편수관 최영복 님, 한국교육개발원 박상만 님,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근 님,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강환동 님, 한림정보산업대학 현영호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NEWS

## 연구재단 소식

### ✧ 임원 동정

○...김효수 이사장 퇴임

우리 연구재단 제 6대 김효수 이사장께서 2002년 12월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

○...한병천 이사장 취임

우리 연구재단 제 7대 신임 이사장에 한병천 전 한국체육대학교 사무처장께서 2003년 1월 1일 취임하였다.

###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2년 12월 24일 오전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02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 2003 회계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 임원 선임
- 기금 조성 자구 노력 방안 보고
- (주)한진의 용역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진행 상황 보고 등

○...우리 연구재단은 2003년 2월 20일 오전 11시 이사장실에서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002 회계 연도 결산

- 2003년도 교과용 도서 발행사 출연금 배분 보고

### ✧ 발행사 2003 학년도 교과용 도서 기증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3 학년도 1 학기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기증받아 '교과서 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2003 학년도 교과용 도서 기증에 협조하여 주신 (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대한교과서(주), (주)교학사, (주)두산동아,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향우산업(주)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 ✧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

○...우리 연구재단은 2003년도 연구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과제와 발행사 및 관련 연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는 총 7개 과제로서 약 9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 2003년도 발행사 출연금 납입

○...우리 연구재단은 2003년 3월 12일 이사장

실에서 2003년도 기금 출연에 대한 업무 협의를 위한 발행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년도 발행사가 출연할 금액은 총 5억 30만 원이며 대한교과서(주) 282,000천 원,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192,550천 원, (주)두산동아 14,850천 원,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5,150천 원, (주)지학사 3,150천 원, (주)교학사 2,300천 원, (주)천재교육 300천 원으로, 출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기금을 기본 재산에 편입 조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기금을 계속 출연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 ✳ 안전회계법인 재단 운영 및 회계 감사 실시

○...우리 연구재단은 2002 회계 연도의 운영 및 결산에 대하여 '안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03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우리 연구재단의 운영 및 결산은 기업 회계 기준과 공익 회계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을 받았다. 23

알림

##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제한 없음.
- 기 간: 수시 접수
- 보 상: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우) 135-9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02) 501-9103(대), Fax: (02) 501-9105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개별 구입을 할 때에는 교과 명과 출판사 및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031) 735-8105	www.daehane.com	〈제6차 교육과정〉 중·고등 학교 국정 도서 〈제7차 교육과정〉 * 초등 학교 전과목 * 중학교 : 국어, 생활 국어(1, 2학년), 국사, 도덕 1 * 고등 학교 : 공업계, 수산계, 해운계 전문 교과
	(주) 교학사	(02) 701-6371	www.kyohak.co.kr	* 고등 학교 : 실업계 농업 및 상업계 전문 교과
	(주) 두산	(02) 3398-2700	www.dong-a.com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및 외국어계 전문 교과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02) 865-8225	www.eduplus.com	* 중 학교 : 도덕 2, 3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관광 영어 및 가사 실업계 전문 교과
	(주) 지학사	(02) 330-5302	www.jihak.co.kr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과학계 전문 교과
	(주) 천재교육	(02) 3282-1773	www.chunjae.co.kr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체육계 전문 교과
	향우산업(주)	(02) 2203-6601~2		* 고등 학교 : 교련

##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2호선 망원역 부근)	(02) 3663-4292
대한교과서(주)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본사 1층) (7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고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민법 제 32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재단 운영을 위한 후원 기금(출연금)을 모금하오니 출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 이 사 장 한 병 천

❖ 출연 대상 :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 출연금 접수 : 수시

❖ 출연금의 종류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 출연 참여 방법

○ 현금은 연구재단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

— 계좌 번호 : (농협) 003-01-19074

— 예 금 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소득 공제용 영수증 발급

※ 출연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의거 종합 소득 금액의 100분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은 출연 방법 별도 안내

○ 분할 또는 별도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출연 가능

❖ 출연금 용도

○ 교과서 관련 조사 연구비

○ 「교과서정보관」 건립비

○ 출연자 지정 용도 등

❖ 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동판으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하고, 정부 포상을 추천하겠습니다.

○ 건물을 출연하신 경우에는 건물의 이름을 출연자의 성명이나 아호 또는 출연자가 원하는 명칭으로 부서하고 건물에 각인하여 보존하겠습니다.

○ 출연해 주신 분의 명단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간행물에 수록하고 간행물의 무상 구독 특전을 제공하겠습니다.

❖ 연락처

○ 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1(서울빌딩 6층)

— 전화 번호 : (02) 501-9103, e-mail : adm@kotri.re.kr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17,855	4,445	22,300
일반 자료	1,908	—	1,908
계	19,763	4,445	24,208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토요일	1~12월	09:00~13:00

\*공휴일 휴관

### 교통편

#### ● 전철

- 강남역(2호선) 2번 출구 진솔문고 방향 우성아파트 사거리
- 양재역(3호선) 2번 출구 뱅뱅사거리 방향 우성아파트 사거리

#### ● 일반 버스

- 17, 66, 68, 78-1, 78-3, 83-1, 97-2, 239-1, 414 역삼초등학교 하차
- 33-1, 289-1 서초2동사무소 하차

#### ● 좌석 버스

- 45, 736-1, 910, 916, 917, 1005, 1005-1, 5500 역삼초등학교 하차

### ● 찾아오는 길 ●

